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사항 > (16건)

1. 정권 말기에 집중된 인사 단행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을 재정비할 것 1
2. 정권 초기에 장관의 실·국장급 인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처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체계를 정비할 것 1
3. 장관이 문제 인력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을 하고, 1급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1
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의 저임금 프리랜서 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프리랜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 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 여부와 국회 허위보고 및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2
6.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협력하여 외청과 소통을 강화할 것 2
7. 대통령실 관련 업무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 2
8. 몰래카메라 범죄에 취약한 공연·체육·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 2
9.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미술 부문과 노년층 스포츠 부문의 지역편중 문제 및 낮은 집행률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고 보완할 계획을 마련할 것 3
10.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예산의 이용으로 낭비성 대통령행사 비용지불 및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3
11.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의 사문서 위조에도 불구하고 상훈 취소를 지연하는 등 포상 관리가 부실한 바 포상 취소 기준 및 관리지침을 점검할 것 3
12. 과거 KTV의 국악공연과 관련된 의혹과 종묘의 사적 사용에 관련된 직원들의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4
13. 전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들의 이력 및 선임 절차를 검증하고, KTV 김건희 황제관람 국악 공연 관련 내부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4
14. 중국의 한국 예능 포맷 표절 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4
15. 국립박물관 ‘뭇즈’의 중국산 모조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대책과 정품 식별을 위한 인증 방안을 마련할 것 5
16.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입법 보완과 단속 전담인력 확충 등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

< 감사관 > (3건)

17.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및 유인촌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감사할 것 6
18. 청와대 관저에서의 KTV의 국악공연 관련 집행 예산 8,600만원을 즉시 환수 조치할 것 6
19.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특정 기업 출신 인사가 핵심과정에 참여한 사안에 대해 조치할 것 6

< 정책기획관 > (6건)

20. AI와 문화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문화기술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체계를 구축할 것 .. 6
21. K-컬처 300조 원 목표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강화하고, K-푸드의 포함 여부 등 K-컬처의 산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것 7
22.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것 7
23. K-컬처 300조 원과 관광 3000만 명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별점을 둘 것 7
2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통일된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근속 수당 도입을 위해 향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8
25.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 재직 시절 창덕궁·근정전 방문 수행 여부와 어좌 착석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것 8

< 문화정책관 > (6건)

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8
2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갑질 및 업무추진비 자료 불일치 등 운영상 부실에 대해 감사할 것 8
2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할 것 9
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성희롱 징계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을 강화할 것 9
30. 대통령실의 문화유산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고궁 및 문화유산의 사적 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 9
31. 김건희 여사의 문화유산 사적 이용 및 근정전 어좌 사진 촬영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9

< 예술정책관 > (27건)

32. 형식적인 국제대회를 통한 군 대체복무 자격 부여 등 예술요원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예술인 병역특례제도 점검을 통해 예술요원 편입대회를 정비할 것 10
33.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해외문화교류 사업의 예산 부정 사용과 학생 안전관리 부실, 허위 보고, 교장 특혜출장 반복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10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검열 예방교육을 정례화할 것	10
35. 국립문화공간재단 설립의 적정성 평가 및 예산 대비 성과 평가 검증을 실시할 것	11
36.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 는 환경을 조성할 것	11
37. 내압 성능을 고려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확대 할 것	11
38. 재해대처계획 제출이 서류상 행정예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제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39. 창무예술원의 회계 운영이 부실함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장기간 집중 지원되었으므로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 정산 등 회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12
40.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장기간 성과 부진과 전략부재 속에 대규모 예산이 반복 투입돼 운영 실태 점검과 구조 개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41.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을 공모에 서 배제하는 등 예술인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	12
42. 예술의전당과 협의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공연장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안전관 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현장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	12
43.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것	13
44.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재구성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임에서 제외된 문학분야 위원을 선임 할 것	13
45. 뮤지컬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13
46. 문화예술인 지원체계가 창작·공연·관객을 연결하는 문화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산업적 기반을 강화할 것	13
47.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상설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14
48.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 재편을 논의할 것	14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의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특정 인물 중심의 화 이트리스트 운영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	14
50.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교수의 과도한 겸직이 본업 소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겸직 및 외부 강의와 실기평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14
51. 무용계 입시 비리 의혹 규명 및 예술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예술계 입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5
52. 예술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주관적 실기평가로 인한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와 공동 대응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53.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 내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15
54. 예술교육 전반에서 드러난 입시 및 채용 비리, 교수 겸직 등의 관행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15

55. 무용계 입시비리 의혹 등 예술교육 전반에서 드러난 입시 및 채용 비리, 교수 겸직 등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입시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16
5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가상화폐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	16
57.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공연을 확대하고 예술단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것	16
58. '방관뮤직'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문화전문회사, 제작사, 방송사 간의 책임을 규명하고, 산하기관 간 현황을 공유할 것	16

< 지역문화정책관 > (10건)

59.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60. 단순 수도권 구분이 아닌 인구 비중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내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17
61.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존 문화인프라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립시설 조성을 추진할 것	17
62. 국가 전략에 맞추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 정책을 설계할 것	17
63. 박물관 상품(굿즈) 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급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제작업체들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8
64. 국립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 역사왜곡도서의 비치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18
65. 공공도서관의 일관성 없는 도서 선정·열람 기준을 개선할 것	18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운영 전반을 개선할 것	18
67. 청와대재단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이 사비로 출연금을 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단 직원을 채용한 사안의 적절성을 조사할 것	18
68. 강화도를 중심으로 고려사 관련 역사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향후 남북 공동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	19

< 문화산업정책관 > (7건)

69. K-콘텐츠 펀드의 투자 부진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	19
70.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연차보고서가 장기간 미제출 상태이므로 제출 절차를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20
71. 문화기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연구기관 설립 논의를 진행할 것	20
72.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콘텐츠 전문 R&D 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유산 R&D를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20
73. 콘텐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K-콘텐츠의 국내 IP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0
74.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콘텐츠진흥원의 해외파견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사무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원 확대 예산을 반영할 것	21

75. 콘텐츠진흥원의 재원 운용방식과 관련해 출연금 구조로 전환하여 재정 성과 환수 강화 및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것	21
---	----

< 콘텐츠미디어산업관 > (41건)

76. 대중문화예술인 경호 과정에서 과잉경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1
77. 인권과 노동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1
78. 공연장 규모가 불충분하므로 기존의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을 전용하거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서 인프라를 확보할 것	22
79. 5만석 규모 K-POP 아레나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80.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건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반영된 남문과 조형물 등을 철거한 경위를 조사할 것	22
81.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확장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된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	22
82.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의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였는지, 여수MBC의 앵커기업 지정 과정이 타당한지 경위를 조사할 것	23
83. 네이버 웹툰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신인 작가가 공정하게 데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	23
84.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예인 기획사와 학원의 선납금 요구 등 불공정 영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23
85. 웹툰 산업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생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장려하고 창작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	24
86. 대형 연예기획사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방송 출연 제한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4
87. 풍자 만화 전시 사례와 관련하여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88.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축소와 상영관 부족 등 기반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정상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4
89. 안무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성명표시 의무화 등 제도화 장치를 마련할 것	25
90. 미국의 외국영화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영화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5
91. 글로벌 OTT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 하에서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 증진을 위한 국내 OTT 통합 지원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25
92. 국내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OTT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5
93.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는 영상 콘텐츠에 전통문화 등 K-컬처 요소를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25
94. OTT와 방송드라마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할 것	26

95. K-POP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팬미팅 구조와 개인정보 요구 등 부정적 관행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6
96. 장기간 제작이 필수적인 애니메이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도 협약과 예산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	26
97. 콘텐츠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보고된 경우 즉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할 것	26
98.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수익을 국내 영화 창·제작을 위한 투자로 환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6
99. 영화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사업의 예산을 복원할 것	27
100. 글로벌 공동제작 로케이션 지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27
101. 역사왜곡이나 피해자 모욕 간행물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원칙과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	27
102.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 문제에 대해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것	27
103. 정부광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27
104.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28
105. 공인(公人)에 대한 정의 및 명예훼손 보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	28
106. 근거 없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할 것	28
107. 대전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 개선을 위해 대관료 인하와 경쟁 스튜디오 대비 특화전략을 마련할 것	28
10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의 종교모임 강요와 공금 유용, 급여 부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8
109.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할 것	29
110. 대형 공연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 공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29
111. 대중문화예술 공연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본인 확인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9
112. 지방에 복합형 K-POP 아레나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	29
113. 도서관에 비치된 사회 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재심의 등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	29
114. 대통령 풍자 카툰의 전시로 인한 만화진흥원의 만화 공모전 관련 예산 원상 복구 등 대안을 마련하고, 만화 전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
115. 공연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 시설 준비뿐만 아니라, 기존 체육·음악 시설을 전문 공연장으로 개조·전용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할 것	30
11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단체지원 사업이 공익성을 잃은 채 극우단체에 채택 심사·서면 의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실시할 것	30

< 저작권정책관 > (8건)

- 117. 중국 내 국내 창작자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 30
- 118.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내부 감사 규정을 왜곡한 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 31
- 1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경영, 외부 회사 설립을 통한 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31
- 12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잔여 미분배금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31
- 12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소수 정회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1
- 1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부 감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독립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 검증 체계를 구축할 것 31
- 123. AI 시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와 입증책임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2
- 1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불이행, 저작권료 배분 부실, 내부직원의 외부회사 설립 문제, 내부감사 왜곡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32

< 종무실 > (2건)

- 125.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기구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32
- 126. 전통사찰법의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현장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2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1건)

- 127.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보도검열관실이 제외되어 5·18 당시 역사적 상징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 해외홍보정책관 > (1건)

- 128.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본해 표기 및 독도 오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것 33

< 관광정책관 > (8건)

- 129.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33
- 130. 정권 초기에 한국관광공사의 기관장 인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33
- 131. 지속가능한관광도시 지정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지원할 것 · 34
- 132.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한국민속촌 직원의 허위 발주와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34

133. 한국관광공사의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집중체결 및 허위 현장실사보고서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34
134.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위기에 대응하여 현실화방안을 검토할 것	34
135.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예산 투입 대비 관광객 감소 및 인근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 사례 등 막대한 비용 대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타당성 재검토할 것	35
136. 성과가 저조한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	35

< 국제관광정책관 > (4건)

137. 카지노 사업장의 노동환경 관련하여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35
138.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알선 관광이 불법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5
139. 중국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력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36
140.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를 관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36

< 체육국 > (36건)

141. 경기용 실탄과 총기 유출 사고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사격연맹의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파악하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경기용 탄피의 관리를 강화할 것	36
1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천선수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	36
143.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현장에서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타 예술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폐지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36
144. 프로야구의 고가 시즌권과 선예매 확장으로 인한 암표 및 팬 소외 문제와 관련하여 티켓 판매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37
14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의 암표와 매크로 예매로 인한 가격 폭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KBO와 협력하여 즉각적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	37
146.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신고센터 방식의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37
147. 체육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생활체육 지원 공백과 지자체의 체육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 등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신속히 정상화할 것	38
148.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대한체육회 후원사에 대한 독점공급권 제도 관련 입장 변경으로 인한 선수단복 품질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고 품질 안정화 대책, 독점공급권 관련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8
149.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성과를 낸 비인기 육상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38
150. 프로야구 경기의 장애인석 확충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KBO와 협력하여 장애인석을 확대하고 민원창구를 정비할 것	38

151. 체육단체의 자체 징계 구조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38
152. 반복되는 체육계 미성년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39
153. 마라톤 대회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참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서약서를 개선할 것	39
154.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위반, 청년 인턴 장기간 근로 등 노동권 침해의혹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강화할 것	39
155. 야외 골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	40
156.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VIP 초청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와 승인 절차를 공개하고, 블랙리스트·횡령·학교폭력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의전·초청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	40
157.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스포츠공정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축구협회를 조사하고, 체육단체 전체에 적용할 표준화된 공정위원회 운영 지침을 정비할 것	40
158. 체육 예산 증가율이 0.3%로 저조하므로 국민 생활체육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0
159. 국비로 건립된 장흥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개소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40
160.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1
161.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명확히 역할분담을 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41
162. 대한근대5종연맹의 부적절한 운영과 인사 비위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미비한 조치를 보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감사할 것	41
163. 야구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것	42
164. KBO 허구연 총재의 범인카드 사용 및 해외 출장 관리, 회계 투명성, 국회 자료 제출 태도 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점검을 강화할 것	42
165.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 조사관 비율 증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42
166. 선수들의 훈련공백 방지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완공 후 이전 및 철거 원칙을 준수할 것	42
167. 승강제 리그 시스템 구축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3
168. 스포츠 과학원의 R&D 사업의 특정 연구카르텔이 허위 인력 등재,페이백 등 조직적인 연구비 부정 수령의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43
169. 프로축구 오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종목단체 지원금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43

170.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자격’ 심판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43
171.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 종목인 한궁의 국가적 육성과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한궁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	43
172.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및 기관경고 불복 재심 절차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것	44
173. 대한체육회장의 공적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4
174. 지자체와 스포츠단이 스포츠경기를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4
175.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체육회 차원의 노동인권 교육 및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것	44
176. 호남 지역의 레저시설이 전무하므로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5

< 체육협력관 > (10건)

177. 장애인스포츠클럽 기반여건 개선을 위해 대한체육회 종합시스템 공동 활용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45
178. 88 서울 패럴림픽 기념요소를 올림픽 공원 기념사업에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45
179. 전북도 올림픽 유치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것	45
180. 전북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자체 및 대한체육회와 협업하고, 유치계획의 로드맵을 공개할 것	46
181.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예산의 지방 부담 비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46
182. 제주 장애인체전 필수인력의 항공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열악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력할 것	46
183. 패럴림픽과 장애인체전의 중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보편적 시청권 항목에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할 것	46
184.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농아인·시각장애인연맹 간 예산 격차 문제를 검토할 것	47
185. 일본 올림픽박물관이 조선인 선수들을 ‘일본 선수’로 표기한 오류 시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도록 지속적 외교조치를 취할 것	47
186. 체육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음악경연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중 집행한 문제에 대해 감사할 것	47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8건)

187.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의 부적절한 겸직, 입시 개입 의혹 및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48
188. 성기숙 교수의 전통예술원장 선출 시 인사위원회의 형식화 문제 조사 및 논란 인사 임명 관련 인사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8
189. 입학심사 과정에서 예술고등학교 강의 및 입시위원 불법참여 등 제척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입시관리를 할 것 48
190. 교수 임용 후보자의 허위 경력 제출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를 비롯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48
191. 성비위 등 중대 징계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마련할 것 48
19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전공 간 전과 절차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 49
193. 실제로는 박사 학위가 아닌 실무 교육만을 이수한 자가 한예종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49
194. 석·박사 과정 수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캠퍼스 이전·통합을 추진할 것 49

< 국립중앙박물관 > (18건)

195.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내 장애인 관람객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장애 유형별 관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 49
196. 국립박물관 내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을 전수조사하고, 부적정 시설의 경우 이를 개선할 것 50
197.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운송 용역이 공정한 선정 기준과 객관적 입찰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50
198. 국외 전시 추진 시 국외 조사 및 공동 연구를 수행, 연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50
199. 보존과학센터의 유물 보존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 50
200. 수장고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재난 발생 시 유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입시 보관 매뉴얼을 마련할 것 50
201. 성덕대왕신종 타종 재개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보존·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 51
202. 학예 전문인력 비율을 제고하고 유물구입 예산을 확충하여 관람객 유치를 확대할 것 51
203.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박물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51
204. 외국인 관람객 유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것 51
205. 관람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므로 유료화 전환 검토 및 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2

206. 관람객 급증 대비 중앙박물관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굿즈 등 박물관 활성화 성공사례를 지역박물관으로 확산할 것	52
207. 관람 환경 개선 및 프리미엄 전시 확대를 위해 유연한 가격체계의 유료화 도입을 검토할 것	52
20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한 송광사 오불도의 보물 지정 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3
209. 전통문화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수립할 것	53
210. 대통령실의 문화정책 수립·추진 시 중앙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53
211. 고조선 관련 전시 비중을 확대하고 서술 콘텐츠를 강화할 것	53
212. 국립진주박물관의 ‘화력조선’ 콘텐츠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호응을 얻는 등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립박물관이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	54

< 국립국어원 > (2건)

213.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시정할 것	54
214. 서울시의 주요 정책 명칭에 외국어 사용과 어문규범 위반사항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시정 조치를 권고함과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시 국립국어원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	54

< 국립중앙도서관 > (3건)

215. 역사 편향 및 왜곡 서술 논란이 제기된 사회 교과서의 국·공립 도서관 비치율 시정할 것	55
2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장기화된 반복 공사로 이용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 운영 방식과 이용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5
217. 국립중앙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	55

< 국립장애인도서관 > (2건)

218.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 진행을 위해 전자책·AI 활용 공공간행물 제작 등을 추진할 것	56
219.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독립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6

< 국립현대미술관 > (2건)

220. 미술품 운송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경쟁과 산업 육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6
221. 흥행 전시가 외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체 기획 및 큐레이션 역량을 강화할 것	57

< 한국정책방송원 > (10건)

222. 비상계엄 국면에서 KTV가 편파적으로 언론에 영상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허위해명한 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것	57
2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국악공연에 대한 ‘무관중 공연’으로의 허위설명과 행사 기획 책임자 인사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	57
224. 전례가 없는 청와대 관람 공연제작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책임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	57
225. 계엄 위법성 지적 내용 자막에 대한 원장의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조치할 것	57
226. 언론사에 대한 영상 제공 중단 및 유튜브 채널 고소·고발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소송비용 국고 환수 및 구상권에 대하여 조치할 것	58
227. KTV 前원장의 배임죄 등 혐의에 대한 고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	58
228. 계엄 동조 보도 및 이에 따른 원장 직위해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송을 검토할 것	58
229. 수어통역자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수어통역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8
230. KTV가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닌 대통령 홍보를 넘어 총리의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략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9
231. 성추행 혐의 있고 근무태도 부적절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건)

23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탁기관의 국보보조금 부정징수에 관한 자체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60
233. 해외복권 구매대행에 대한 허위광고를 차단하고 사업자들이 주소만 옮겨서 재개설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60
23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면 심의 도입 및 범부처 공조를 포함한 근본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60
235. 청소년의 소액 결제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요소를 검토할 것	60
236. 소싸움 사행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60
237. 불법도박 플랫폼과 로또 판매 한도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61
238.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중독 치유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61
239.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 유인책에 대한 실효적 단속 방안을 마련할 것	61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건)

- 2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원장의 해외출장 승인 기준을 재정비하고, 공적 출장과 개인 일정이 결합된 여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62
- 24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인사 시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절차를 강화할 것 62

< 세종학당재단 > (7건)

- 242. 세종한국어평가의 직영 전환 로드맵과 민간위탁 최소화 기준을 마련할 것 62
- 243. 지역별 수강생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적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것 62
- 244. 해외파견 교원에 대한 예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63
- 245. 한국어 학습목적별 맞춤형 교육과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 63
- 246. 기초 시스템 장애와 해외 학당의 예산 혼용 문제를 해결할 것 63
- 247.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지정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64
- 248. 요르단 등 중동·아프리카의 희망국 대상 학당 추가지정·지원확대 검토 및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서 K-콘텐츠 활용한 교육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6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9건)

- 249.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 추천, 심의위원 구성 및 지원금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 64
- 250. 비상임위원이 예술 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추천 구조와 제척·기피 제도를 강화할 것 65
- 251. 전담심의제 도입으로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할 것 65
- 252. (주)한국문화진흥 전임 대표이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경영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5
- 253.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65
- 254.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유통을 차단할 것 65
- 255.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관련 재원 확충 방안과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6
- 256. 대폭 삭감된 지역예술도약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것 66
- 257. 나눔티켓 기부 공연의 활용률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홍보와 매칭 방식을 개선할 것 66

< 예술의전당 > (4건)

- 258. 예술의전당이 누적 적자와 낮은 경영평가에도 임원 보수·성과급을 지속 지급하는 이상한 운영
과 책임 부재 문제점을 인식하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66
- 259. 공연장 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험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것 67
- 260. 예술의전당은 현재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구조·시설노후·공공성 훼손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 67
- 261. 식음료사업 민간위탁 전환으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대관 편중 운영으로 기획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타 기관 대비 낮은 객석점유율까지 겹쳐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기획
공연·전시를 확대하는 등 수익·운영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7

< 예술경영지원센터 > (3건)

- 262. 무용계 공모 및 심의 과정에서 특정 인물 중심의 화이트리스트 운영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 68
- 263.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성 보조금 중심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장기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68
- 264.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구조를 개선할 것 6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5건)

- 265. 재외국민 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 근거 없이 배제한 조치와 창작준비금을 사후 환
수한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포용적인 예술인복지제도를 마련할 것 68
- 266. 예술인신문고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법률 지원 연계를 강화할 것 68
- 267. 청년 예술인의 공동 창작 환경을 고려하여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를 보완할 것 69
- 268. 공공 미술기관 내 개인 표현 제한 등 검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정례화 할 것 · 69
- 269.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69

< 한국문학번역원 > (3건)

- 270. AI 시대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 69
- 271. 영화·드라마·웹툰 등 K-콘텐츠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 70
- 272. 고전·대표 문학 작품은 탈락시키고 친북성향 등 부적절한 작품을 번역대상으로 선정하는
구조를 개선할 것 70

< 언론중재위원회 > (3건)

- 273. 중국 혐오와 차별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 70
- 274.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훼손 및 악용을 방지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71
- 275.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7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건)

276. 2026년도 예산에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반영 부족으로 생계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예술 강사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예산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 71

< 한국콘텐츠진흥원 > (16건)

277. 해외센터장의 비위 감사보고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직제 신설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72
278. 해외센터장의 비위 의혹과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 72
279. 해외 센터장 비위, 직원의 음주사건 징계 지연 등 내부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 감사의 한계를 개선하고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72
280. 게임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여 수출 다변화·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할 것 · 72
281.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업체가 재선정되지 않도록 사전 배제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 ... 73
282. 자체 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인건비 지출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점검할 것 73
283. 뉴콘텐츠센터 이전 과정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이전지 계약 등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뉴콘텐츠센터 시설관리 업체의 사적 유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74
284. 단년도 보조금 중심의 공모사업의 다년도 사업 등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74
285. 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성과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74
286. 글로벌 협업을 병행하여 국내 IP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 75
287. R&D 사업평가 부진과 게임인재원의 높은 중도탈락률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5
288. 해외 비즈니스 센터의 추가 확대를 중단하고 내실화 방안을 제출할 것 75
289. 축소·폐지 위기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 76
290. 대중문화예술상 용역 심사 과정에서 경력 검증과 허위 기재 시 제재를 명시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76
291. 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임금 지급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체불시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76
292. 다년제 게임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펀드 내 게임 계정을 신설할 것 76

< 영화진흥위원회 > (18건)

29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독립영화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 77
294.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의 취지가 검열로 오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77
295. 독립영화 취지와 맞지 않게 편향적인 심사로 인해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는바, 균형 잡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77
296. 독립영화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인디그라운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AI 고도화를 지원할 것 77

297. 삭감된 지역·독립영화 예산을 복원하고, 여성·다양성 영화 가산점 제도는 유지할 것	78
298.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사업의 예산을 복원하고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78
299. 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협력 모델로의 복원을 검토할 것 ·78	
300. 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1년 단위 입찰 운영을 개선하고 입찰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	78
301. 영화의 구조적 경쟁력 증진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할인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것	79
302. 홀드백 제도 도입, 극장 관람 활성화, 민간자금 투자 기구 도입, 불법 촬영 대안, 정액제 구독형 관람권 등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화산업의 핵심 정책을 적극 실행할 것	79
303. 한국영화 제작 증가를 위하여 중예산 영화 지원을 확대하고 홀드백 제도를 실행할 것 ...	79
304. 시나리오 공모전의 다양성 가산점 제도개선의 역행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해 순위가 뒤바뀌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80
305. 영화 제작 과정에서 표준 크레딧 기준 등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80
306. 블랙리스트 특위의 피해 인정 의결 요청에도 안전 상정 부결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할 것	80
307. 영화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화 제작 현장의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	81
308. 통신사 할인등에 따른 영화티켓 수익배분 왜곡구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	81
309. 글로벌 협업과 제작방식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바,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81
310. 영화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홀드백' 원칙을 제도화할 것	81

< 영상물등급위원회 > (7건)

311. 제주4·3 등 역사적 사실 왜곡 콘텐츠의 등급판정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	82
312. 수사 진행 중인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배제 기준을 확립할 것	82
313. 국내 OTT처럼 운영하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것	82
314. OTT 자체등급분류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심사가 불일치할 경우 조정 기간 동안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한계를 보완할 것	82
315. 영화 상영 시 TV 송출 광고가 재심의를 받는 이중규제 문제를 보완할 것	82
316. 사전등급분류제를 적용받는 영화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한 OTT 사업자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83
317.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 신청 수수료 부과 또는 분담금 제도 도입 등 비용 부담 구조 개선방안 검토할 것	83

< 한국영상자료원 > (2건)

- 318. K-콘텐츠 상징물과 원본 필름을 보관할 수장고 확충을 추진할 것 83
- 319. 공공 아카이브에 OTT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83

< 게임물관리위원회 > (5건)

- 320. 해외게임사에 집중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84
- 321. 중소·인디 게임의 등급심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업계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 84
- 322. 숙박업소를 가장한 ‘게임텔’의 PC방 운영에 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 .. 84
- 323.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중독과 혐오 표현 확산 문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84
- 324.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체계를 정비할 것 85

< 한국저작권위원회 > (3건)

- 325. 저작권 사용료·수수료 심의 기관과 피심의 이익단체 간 인적·금전적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85
- 326.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의견 수렴 적극 진행할 것 85
- 327. 토렌트 특성을 악용한 고소 남발 등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6

< 한국저작권보호원 > (3건)

- 328. K-콘텐츠의 텔레그램 불법유통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접속차단 및 본사 협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86
- 329. 해외 불법 저작물의 낮은 삭제율 개선을 위해 선제적 접속차단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 86
- 330. 불법 웹툰 사이트와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에 대응하여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86

< 한국언론진흥재단 > (16건)

- 331. 공익광고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 중소 언론사 지원이 목적임에도 대형 언론사에 배정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배분 기준을 개선할 것 84
- 332. 정부광고 심사위원 명단 관리의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내부 검증 체계를 정비할 것 87
- 333. 정부광고 심사위원 명단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심사위원 풀 운영을 점검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87
- 334. 정부광고 심사위원 원본 명단을 제출하고 광고 전문성과 무관한 심사위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7
- 335.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마련할 것 88

336. 언론진흥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가짜뉴스 매체에 정부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88
337. 언론진흥재단 열독률 조작 의혹의 무혐의 종결에도 이사장 해임건의로 조직 내 분열을 야기한 유병철 이사, 남정호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	88
338. 정부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지역방송사 지원금 규모의 산출 근거를 제출할 것	88
339.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언론 길들이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할 것	89
340. 특정 단체 행사에만 프레스센터 및 지원금을 허용하지 않도록 프레스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극우 정치적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책임자를 징계할 것	89
341. 프레스센터 대관, 단체지원 사업 등 주요 사안에서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9
342.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	90
343. 정부광고 수수료의 적정 비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90
344. 정보 접근권을 위한 신문 공동수송 사업 예산 축소 문제를 해결할 것	90
345. 프레스센터 미화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처우 악화 문제를 개선할 것	90
346. 재단은 정부광고 집행 시 가짜뉴스 확산 매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매체에 대한 검증 참고자료를 정부 기관에 적극 제공할 것	91

< 국제방송교류재단 > (1건)

347. 삭감된 위성사업비 예산의 복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의존도를 낮출 것	91
--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건)

348. 전자책 구매 시 약관에 소유권에 대한 안내를 명시하고 가격을 합리화할 것	91
349. 해외 사례 반영하여 인구소멸 지역의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92

< 대한체육회 > (42건)

350. 국가대표 선수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신속히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2
351.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IOC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대한체육회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유치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92
352. 전북도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와 협의를 강화하고 분산 개최 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	92
353. 사격 실탄 유출과 관련해 사격연맹의 보고와 통제가 미흡하며 사무처장의 근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3

354. 복싱대회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 및 관리 책임 재점검을 통해 징계와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안전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과 더불어 제보자 보호 및 피해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93
355. 취임 직후 회장·총장실의 집기를 과도하게 교체한 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4
356. 지난해 국정감사와 동일하게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및 통계자료 등 자료제출이 제출할때마다 바뀌는 부분을 지적하고, 인건비, 예산 측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맞지 않고 있으며,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와 청렴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되고 심지어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들조차도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94
357.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종목단체 회계법인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법인만 바뀌 올해도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바, 제도를 개선할 것 95
358.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것 95
359.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임 당시 발생한 후원금 및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의 유용·부적정 지출과 해외 출장비 정산 미흡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구조적 운영 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95
360.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특별 감사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 95
361.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96
362. 종목단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금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체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목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96
36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소한 로잔사무소가 폐쇄되었는바, 국제 스포츠외교 기반을 재정비할 것 96
364.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 보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하한선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96
365.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계획의 지연으로 지자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요구에 맞춘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 97
366. 코치의 미성년 선수에 대한 성폭력·폭행 가해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징계체계를 확립하고 미흡한 사후조치를 개선할 것 97
367. 폭력·성비위 지도자를 배제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를 확립할 것 97
368.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부정한 회계사용과 빙상연맹의 국회 허위 자료 제출 등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97
369. 빙상연맹의 징계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대한체육회가 즉각적으로 관여하여 외부 감사를 할 것 98

370. 빙상연맹의 지도자 인사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인사 밀어내기 등 부당한 조치를 개선할 것	98
371. 빙상연맹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을 따르지 않은 징계 조치에 대해 선수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단체 지정 등 조치할 것	98
372. 빙상연맹 회장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회의록을 제출할 것	98
373. 빙상연맹 비위 특정감사 이후에도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체육회·종목단체의 징계 회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상 허점을 개선할 것	98
374.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대회 운송비가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고,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실 대응한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99
375. 프로축구, 전국체전 등에서 오심이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99
376. K리그에서 현재 심판 배정에 학연·지연 등 카르텔이 형성되었으므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100
377.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VAR 활용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100
378. 공소시효 경과 사안에 대한 재조사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영구제명된 지도자의 현장복귀도 철저히 차단할 것	100
379. 해외에서 성폭력·폭행·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로 해임된 지도자의 국내 지도자 채용 시 검증 절차를 수립할 것	101
380. 장흥교육원 건설비 지원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정부에 운영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자생가능성을 검토할 것	101
381. 경직적인 회원단체 승인제도로 인해 종목발전과 국제대회 참가 기회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임시참가제 등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102
382. 부산 전국체전에서 발생한 복싱 오심 등 심판운영 미숙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2
383.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회신 지연 및 미이행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2
384. 온라인 투표 확대 등 체육단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검토할 것	103
385. 스포츠영웅 헌액식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예산 복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3
386. 태릉사격장이 유네스코 지정으로 보수가 불가능함에도 선수의 훈련 보장을 위해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시설보수를 진행할 것	104
387. 학생선수 대상의 무자격지도와 폭행 등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	104
388. e스포츠와 파크골프 등 신규종목의 전국체전 포함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04
389. 입시 승부 조작 의혹 인사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05
390.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 인사 및 비리 등 운영 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105

391. 시도 체육회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지원 규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105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9건)

392. 경영평가 가점을 위해 온라인 강좌 수강을 허위로 처리한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105
393. 도급업체 직원에게 공식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령을 내린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조치할 것	106
394. 도급업체의 보안규정과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	106
395. 이사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것	107
396. 과거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체육인에 대한 추가 보상 검토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사장의 이해관계와 관련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07
397. 스포츠토트 모바일 발매 도입에 따른 사행성 우려와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107
398. 올림픽테니스장 노후화와 국제대회 대비 부족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 계획을 마련할 것	107
399. 체육시설 바닥재로 쓰고 있는 고무칩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인 PHAs 등이 검출된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내체육시설 바닥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	108
400. 스포츠 과학원 R&D 사업의 특정 연구카르텔 독점 문제와 파생되는 연구비 부정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108

< 대한장애인체육회 > (8건)

401.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재난대피훈련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선수 참여를 의무화할 것 ·	109
402. 이천선수촌 내 종목별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 선수용 수중회복실을 설립할 것 ...	109
403. 2025년 제주 장애인체전 필수인력의 항공료 삭감에 따른 대회 운영 차질 문제를 해결할 것	109
404.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직원 퇴사율 증가 문제에 대응해 인력을 보강할 것	109
405. 텐덤바이크 파일럿을 포함하여 비장애인 보조 인력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보험 가입을 제도화할 것	110
406.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 입지와 교통, 주차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0
407. 장애인 종목단체의 법인화를 지원하고 기부 및 후원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10
408. 지적장애인스포츠 협회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분리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0

< 태권도진흥재단 > (2건)

409.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관련해 단독등재 및 북한과의 공동등재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것 111
410.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 111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2건)

411. 전임 대표의 특혜채용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장기간 병가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것 111
412. 올림픽테니스장 노후화와 국제대회 대비 부족한 시설, 급등한 대관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행사 지원을 강화할 것 112

< 스포츠윤리센터 > (5건)

413. 대한근대5종연맹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 지연, 코치 선발 과정의 규정 위반 의혹 등 운영과 인사 비리에 대해 징계 조치를 강화할 것 112
414. 대한탁구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선수 교체를 한 점에 대해 징계 재조치를 할 것 112
415.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비위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 113
416. 스포츠윤리센터의 상담 정규 인력을 확충하고 CTR 콜센터를 구축할 것 113
417. 직원의 채용 내부자료 무단 열람으로 경징계 처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장에게 징계 과정과 회의록 관리가 보고되도록 할 것 113

< 한국스포츠레저 > (1건)

418.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 확대 이후 비대면 판매 금지 조항으로 인해 소상공인 판매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13

< 한국관광공사 > (19건)

419. 수익계약 관련 허위 작성 현장실사보고서와 부적절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할 것 114
420. 상임감사의 고액 해외출장 및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114
421.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저조한 사용률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 114
422.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취약계층 소외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의무를 이행할 것 115
423. 사장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력이 강조되도록 공식 절차를 수립할 것 115
424.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협력기금과 부채 상환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 116

425.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장 선임하고 공사 역할을 확대할 것	116
426.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해 관광객 보호를 위한 위기 단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K-관광 이미지 훼손 방지책을 마련할 것	116
427. 국내 지도앱의 오류 개선, 다국어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국내 앱들과 협력할 것	117
428. 기초지자체로 의료관광 협의체를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할 것	117
429. 성과가 저조한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	117
430. 성비위 및 이해충돌 의혹 있는 간부·직원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할 것	117
431.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 ..	117
432. 대북관광 자산 훼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광 연구 추진 경위를 재점검할 것	118
433.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센터 2개소를 신설할 것 ..	118
434. 특수어 관광통역사의 현장 투입 방안 마련할 것	118
435.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과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19
436.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후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 관과 적극 협의할 것	119
437. 중국인 단체관광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하여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리를 강화할 것	119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2건)

438. 사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고려 여부를 재검토할 것	120
439. 기관장의 헌법 인식 표명을 회피하지 말고, 사장 선임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 ..	120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2건)

440. 위탁 상담기관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관리 미흡 및 부적격 기관에 대한 위탁 문제와 국 고보조금 부정 징후 관리 미흡에 관하여 철저히 전수 조사할 것	120
44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21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일반사항) 16건	
1. 정권 말기에 집중된 인사 단행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을 재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선임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관계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토록 하겠음
2. 정권 초기에 장관의 실·국장급 인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처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체계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 7개 중 6개, 고위공무원 나급(국장) 직위 20개 중 17개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마쳤음('26.2.6 기준)
3. 장관이 문제 인력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을 하고, 1급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5.11.5일자로 해당인사에 대한 교체 인사를 하였음 * 황성운 前 기획조정실장(現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유병채 前 국민소통실장(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의 저임금 프리랜서 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프리랜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아리랑TV} '25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25.5~8), 직원 등 대상 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25.10월),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26.4월) ○ ^{KTV} 프리랜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계획(안) 마련 시행*('25.10.~) * 제작비 지급규정 개정을 통한 실질임금 상향, 제작부서별 수시 업무 간담회 및 고충사항 반영 등 ○ 국악방송 재방송료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하여 '27년 예산 확보 추진('26.~) <향후 추진계획> ○ ^{아리랑TV} 직종별(작가, MC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공포 및 시행(~'26. 6월) ○ 국악방송 공개음악회 개최시 프리랜서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지원('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 후 사고수습 본부 회의 주재 여부와 국회 허위 보고 및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자료제출 완료
6.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협력하여 외청과 소통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빌딩 개발 관련 대응,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세계유산위원회 조선왕릉 이행상황 점검회의 등 긴밀한 협력 수행 ○ 장관, 차관, 청장 참석 업무보고('26.1.16.) 및 수시 실무 협의 실시 - ('26.1.~3.) 정책(실무)협의회 4회, 주요 현안사항 공유 11건 등
7. 대통령실 관련 업무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향후 공적 업무가 아닌 경우에 직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8. 몰래카메라 범죄에 취약한 공연· 체육·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일부 완료) ○ 행안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매뉴얼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공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와 탐지장비를 통한 불시 점검 요청 예정 ○ 국립박물관의 경우 기관별 별도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통해 수시 점검 진행 ○ 국립중앙도서관 몰래카메라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몰래카메라 자체 점검('25.7.26, 20개소) - 성범죄, 불법촬영 등 관련 리플릿, 포스터 부착('25.8.12, 방배서 협조) - 여자 화장실 안심벨 설치('25.11월, 34개소 154칸)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전수 점검('25.9.8/서초구/70개소) - 불법촬영 예방 스티커 및 포스터 자체 제작(3종) 및 관내 부착('25.10.20, 34개소) -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26.1~2월 초) *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여자화장실(16개소 83칸)을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 운영 ○ 올림픽공원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 (기존) 만남의광장 옥외화장실 1개소 - (신규) KSPO DOME 12개소, 핸드볼경기장 3개소, 올림픽수영장 6개소, 옥외 화장실 6개소('26년 1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상반기 지자체 공연장 담당자 대상 공연안전제도 설명회 홍보 실시('26.6월) ○ (국립박물관) '27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연중) 및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정기 점검('26.6월/11월)
9.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미술 부문과 노년층 스포츠 부문의 지역편중 문제 및 낮은 집행률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고 보완할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스포츠) 현재('26.2.) 상품권 신청률*은 약 90%이며, 충분한 사용기한 확보를 위해 '26.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 208개 참여 지자체 대상 배정 상품권 수(61.3만장) 기준 ○ (예술) 성과 재평가, 보완 수립 및 시행(~'25.12.) - 온라인 예매처 확대(기존 5개사 → 최종 7개사) - 오프라인 현장할인 도입 - 지역 참여 확대 : 서울 외 지역 쿠폰사용 가능 시설 비중 확대(기존 49% → 최종 65%) - 공사립미술관 및 전시기획사 대상 전화·메일을 통한 참여 독려 지속 진행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25년 국감 당시 2.4% → 최종 13.5%)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 신청자 대상 정기적 사용 안내 문자 발송 등 지속적 사용 독려(~'26.6월)
10.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예산의 이용으로 낭비성 대통령행사 비용지불 및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이용 관련] 예산 이용(移用) 내역 기재출(2025. 10. 20.) - 수의계약 내역 제출(2025.10월말) <향후 추진계획> ○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 관리 중
11.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의 사문서 위조에도 불구하고 상훈 취소를 지연하는 등 포상 관리가 부실한 바 포상 취소 기준 및 관리지침을 점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장관상 취소 조치 완료(2022 젊은 건축가상, '25.10월) ○ 포상 취소 기준 점검 완료('25.11월) ○ 개별 포상 추진 시 추천자 검증 철저 및 취소 등 조속한 행정처리 요청('26.3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2. 과거 KTV의 국악공연과 관련된 의혹과 종묘의 사적 사용에 관련된 직원들의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KTV 국악공연 관련 특정감사 완료('25.12.30.) -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KTV 등 관련자(11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 ▲규정과 다르게 청와대 장소사용을 허가한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 요구 -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실 제출('26.1.15.) - 징계 처분('26.2.24./'26.3.10.) 및 경고 조치('26.1.13.) 완료 ○ 종묘의 사적 사용 관련 조사결과 제출 - 종묘 등 문화유산 사적 사용 관련 국가유산청 특별감사 실시('25.11.~'26.1.) -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실 제출('26.1./국가유산청)
13. 전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들의 이력 및 선임 절차를 검증하고, KTV 김건희 황제관람 국악공연 관련 내부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KTV 국악공연 관련 특정감사 완료('25.12.30.) -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KTV 등 관련자(11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 ▲규정과 다르게 청와대 장소사용을 허가한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 요구 -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실 제출('26.1.5.) - 징계 처분('26.2.24./'26.3.10.) 및 경고 조치('26.1.13.) 완료 ○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선임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일부 기관에서는 임원추천 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자질, 전문성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직위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관계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토록 하겠음
14. 중국의 한국 예능 포맷 표절 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의 자력 구제 대응을 돕는 바우처 지원 확대('25년 8.8억 → '26년 18억 증액) *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사업(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대상) 한류 콘텐츠 해외수출수출예정 포함 국내기업, 개인 및 협의회 -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 선택,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 ① 보호전략 컨설팅, ② 불법유통 감시, ③ 침해 감정·조사, ④ 소송지원, ⑤ 저작권 등록 지원 등 ○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 논의('25.1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 국립박물관 ‘몫즈’의 중국산 모조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대책과 정품 식별을 위한 인증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박물관 문화재단-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지재권 교육 및 보호 관련 MOU 체결('25.11.19.) ○ 몫즈 입점업체 대상 지식재산권 확보 및 침해 대응 교육('25.12.3.) ○ 몫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부처 회의('26.1.13.)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지식재산처, 관세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몫즈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오프라인 실태 조사('26.1.28.) * 박물관 몫즈 상품의 불법 복제품 및 유사품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 조사(인사동·명동·명동지하상가 공예·기념품 판매매장 등)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의 자력 구제 대응을 돕는 바우처* 지원 확대('25년 8.8억→'26년 18억 증액) *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사업(한국저작권보호원) - (지원대상) 한류 콘텐츠 해외수출(수출예정 포함) 국내기업, 개인 및 협약체 -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 선택,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 ① 보호전략 컨설팅, ② 불법유통 감시, ③ 침해 감정·조사, ④ 소송지원, ⑤ 저작권 등록 지원 등 ○ 맞춤형 해외저작권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공모·선정(66개 지원/ 21개 선정) 및 지원(3월~12월) <향후 추진계획> ○ 홀로그램을 활용한 스티커 등 정품 인증방법 확대 ○ 전용 납품 패키지·포장재 디자인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추진
16. 암표 거래 급증에 대한 입법 보완과 단속 전담인력 확충 등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개정 공연법 국회 본회의 의결('26. 1. 29.) - 개정사항: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부정행위 방지 사업자 조치의무 신설, ▲신고기관 지정 근거 신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몰수·추징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 ○ 개정법률 위임사항에 대해 공연법 시행령 개정 추진('26.상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관) 3건	
17.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및 유인촌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감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계엄에 활용하기 위해 사전계획 하에 한예종을 폐쇄했는지 조사('25.11.25.~'26.1.16.)하였음. ○ 조사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등 계엄에 활용할 목적으로 출입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당직 총사령실의 지시사항 이행 과정에서 출입문 폐쇄 등 조치한 것으로 확인 * 내란특검에서도 한예종 폐쇄가 '내란과 관계없음' 확인
18. 청와대 관저에서의 KTV의 국악 공연 관련 집행 예산 8,600만원을 즉시 환수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KTV 국악공연 관련 특정감사 결과, 국가계약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 감사결과 보고서 의원실 제출('26.1.5.)
19.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특정 기업 출신 인사가 핵심 과정에 참여한 사안에 대해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축구협회 감사실시('24.12.2~12.31) 및 처분요구 통보('25.3.7.) - 축구협회 회장이 대표로 있는 HDC 자회사인 (주)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을 축구협회에 근거 없이 파견한 건 등에 대해 기관주의, 인사자료 통보, 수사의뢰 등 기조치 ○ 축구협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관리 자문용역 계약'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여부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25.11월) * (권익위 유권해석) 축구협회가 공직유관단체('24.1.1) 이전 HDC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관리 자문용역 수의계약('22.11월)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되지 않음
(정책기획관) 6건	
20. AI와 문화데이터 정책을 전담하는 문화기술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체계를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화미디어산업실 아래,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기술과 신설('26.2.19.) 및 문화분야 인공지능 정책 전담조직인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 K-컬처 300조 원 목표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강화하고, K-푸드의 포함 여부 등 K-컬처의 산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기존 콘텐츠·문화예술산업으로 규정된 K-컬처산업의 범위에 푸드·관광·패션 등을 포함하는 “K-컬처 산업의 재정의” 마련을 위해 각종 통계·기준 정리 중 * 콘텐츠·문화·예술산업 + 라이프스타일(외래관광·푸드·뷰티·패션 등) <향후 추진계획> ○ “K컬처 산업의 재정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 및 발표 예정('26. 上) ○ K-컬처 산업 재정의와 목표 등 마련 시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조율하며 추진
22.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산 국회 시 해킹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예산 국회에 미반영된 사업이 '27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해킹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27년 정기직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3. K-컬처 300조 원과 관광 3000만 명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별점을 둘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기존 콘텐츠·문화예술산업으로 규정된 K-컬처산업의 범위에 푸드·관광·패션 등을 포함하는 “K-컬처 산업의 재정의” 마련을 위해 각종 통계·기준 정리 중 * 콘텐츠·문화·예술산업 + 라이프스타일(외래관광·푸드·뷰티·패션 등) <향후 추진계획> ○ 외래관광객 3천만명 유치 조기 달성을 위한 범부처 관광 정책 전략 발표('26.2.25, V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 K컬처 산업의 재정의”를 기반으로 관광을 포함한 K-컬처 산업의 새로운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및 발표 예정('26. 上)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통일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근속 수당 도입을 위해 향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공통 임금체계 마련) 관련 용역 시행을 통해 공무원 직무 분석 및 공통 임금체계 설계 검토 중* * 문체부 공무원 근로자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설계 연구('25.4월~'26.7월) ○ (근속수당 예산반영) '26년 근속수당 예산반영 노력* * 국회 예산심의 과정, 본부 및 소속기관 총 10억 규모 신설 논의·미반영('25.12월) <향후 추진계획> ○ (공통 임금체계 마련) - 공통 임금체계 초안 도출(~'26.8월) 및 공론화 논의(~'26.12월) - 관련 제도(규정) 정비 및 공통임금체계 확정('27년) ○ (근속수당 예산반영) - '27년 예산 편성 시 근속수당 예산 반영 노력 지속 (예산처·국회 협의 등(~'26.12월))
25.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 재직 시절 창덕궁·근정전 방문 수행 여부와 어좌 착석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해당 질답서 국회 제출 완료('25.10.24.) ○ 종합감사('25.10.29.) 시 기획조정실장 기관증인 출석하여 관련사항 전반적 질의에 답변
(문화정책관) 6건	
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국비 165억, 지방교육재정 262억 편성 완료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예산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지속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집행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 지속
2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갑질 및 업무추진비 자료 불일치 등 운영상 부실에 대해 감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기관장 비위행위 점검을 위한 사무검사 실시('25.11.3~28/회계사, 노무사, 문체부) 및 결과 통보(12.3.) - 공진원 사무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 수립·시행('26.3.6.)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강화, 문화역서울 28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개정,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공진원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기관장 비위행위 점검을 위한 사무검사 실시('25.11.3~28./회계사, 노무사, 문체부) 및 결과 통보(12.3.) - 공진원 사무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 수립·시행('26.3.6.)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강화, 문화역서울 28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개정,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공진원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
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성희롱 징계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기관장 비위행위 점검을 위한 사무검사 실시('25.11.3~28./회계사, 노무사, 문체부) 및 결과 통보(12.3.) - 공진원 사무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 수립·시행('26.3.6.)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강화, 문화역서울 28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개정,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공진원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
30. 대통령실의 문화유산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고궁 및 문화유산의 사적 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화유산 보호 규정 위반 여부 및 사적이용 여부 확인 관련 국가유산청 특별감사 실시('25.11.~12.) -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실 제출('26.1./국가유산청) ○ 김건희 형사고발 조치('26.1.) ○ 궁능유적본부장 징계처분 요구 및 직위해제('26.1.)
31. 김건희 여사의 문화유산 사적 이용 및 근정전 어좌 사진 촬영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화유산 사적 사용 관련 국가유산청 특별감사 실시('25.11.~12.) ○ 김건희 형사고발 조치('26.1.) ○ 궁능유적본부장 징계처분 요구 및 직위해제('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예술정책관) 27건	
32. 형식적인 국제대회를 통한 군 대체복무 자격 부여 등 예술요원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예술인 병역특례제도 점검을 통해 예술요원 편입대회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요원제도 관련 병무청 업무협약('25.11.7.) ○ 예술요원 편입대회 주관기관 간담회('25.12.12.) ○ 음악, 무용 분야 국제예술경연대회 조사('25.12~'26.1.) ○ 예술요원 편입대회 정비 관련 분야별 자문회의('26.4.) - 음악·무용 '26.4.3., 전통예술 '26.4.7. <향후 추진계획> ○ 예술요원 편입대회 병무청 협의 및 예술계 의견수렴('26.6.) ○ 편입대회 개편안 병무청 협의 및 병무청 훈령 등 개정 추진('26.7.~)
33.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해외 문화교류 사업의 예산 부정 사용과 학생 안전관리 부실, 허위보고, 교장 특혜출장 반복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대상 특정감사('25.9.15.~11.7.) 실시 - 교장공모제 심사, 예산·회계 처리, 물품 관리 및 기타 기관 운영 등 감사 <향후 추진계획> ○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중('26년) - 국제문화교류 운영규정 수립, 교장공모제 개선안 등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검열 예방교육을 정례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체부 예술 관련 담당자 등 대상 검열 및 표현의 자유 관련 교육 실시('25.10.24.), ○ 문체부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25.10.~12.) ○ 예술지원기관 대상 상시 온라인 교육 실시('25.11.~)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연중) ○ 문체부 직원 대상 대면 교육 실시('26.상반기) ○ 예술지원기관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26년~) ○ 공공 예술지원사업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술인권리 침해행위 예방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26.하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5. 국립문화공간재단 설립의 적정성 평가 및 예산 대비 성과 평가 검증을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재정성과평가 등에 포함하여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 진행 중 ○ 우리 부 공공기관 효율화, 예산 절감을 위해 당인리 개관준비 업무를 유사분야 공공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 방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지출구조조정 등, ~'26.8.) ○ 업무 이관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예산 확보 등 관계기관(재경부, 예산처 등) 협의 지속 및 개편 방안 마련('26.2.~)
36.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예술인권리보호과' 정규 조직 신설('25.12.30.) -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 증원(4명→5명/'25.12) ○ 예술지원기관 대상 상시 온라인 (표현의 자유)교육 실시('25.11.~)
37. 내압 성능을 고려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KS기준을 무대시설 설계검토기준(문체부고시)에 포함하도록 개정중 ○ 공연법 개정안 국회통과('26.4.6.) -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 기준을 1,000석 이상 → 300석 이상으로 확대 <향후 추진계획> ○ 공연법 개정 법률안 공포('26.4.28.) ○ 고시개정 관련 행정예고 실시('26.5.)
38. 재해대처계획 제출이 서류상 행정예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제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자체 및 공연관련 단체와 협회에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수리업무간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가이드북'('26.3.10.배포완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상황 식별시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의 공연 주최측에 명확한 행정제재가 가해지도록 지자체 전파 및 독려 <향후 추진계획> ○ '공연안전제도 설명회'(연 2회, 문체부 주최)에서 각 지자체 및 단체, 재단 대상 교육('26.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9. 창무예술원의 회계 운영이 부실함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장기간 집중 지원되었으므로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 정산 등 회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창무예술원 '25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완료('26.2.) - 외부 회계법인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차 검증을 통한 단체 사업 세부 집행내역 집중 점검 완료(보조금법 위반 사항 미발견)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집행내역 점검 및 사업관리 감독 강화 계속
40.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장기간 성과 부진과 전략부재 속에 대규모 예산이 반복 투입돼 운영 실태 점검과 구조 개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5년 경영평가 지표개선 등 관련 사항 의원실 보고('25.10.17.) ○ 기관 성과관리 체계 정비 및 구축('26.3.) ○ 기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26.4.)
41.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을 공모에서 배제하는 등 예술인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프리랜서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4. 입찰공고 중) <향후 추진계획> ○ 프리랜서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 체불수입 보장제도 연구용역 추진('26.11. 완료 예정) -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26.상반기), 체불수입 보장제도 운영방안 마련(~'26.하반기) 및 법 개정 추진('27.상반기) ○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추진 - 기획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완료('26.3.) 및 문체부 지침 반영('26.상반기)
42. 예술의전당과 협의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공연장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업무만을 전담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진종오 의원 / '25.11.20.) ○ 현행 공연법에 공연자 교육은 1시간이상 공연장 운영자 책임하 실시하도록 명문화 <향후 추진계획> ○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공연업계와 관계자 의견수렴 및 해당 직무에 대한 연구필요 -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26.하반기) ○ 실질적인 공연자 안전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경주 - '안전 리허설' 시범 적용(~'26.4), 공연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3.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세종문화회관-예술인 복지재단 업무협약(MOU) 체결('25.12.24.) * 세종문화회관 협업을 통해 산재보험 홍보 추진 ○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산재보험 적용 확대('26.~) * 예술로(예술인파견지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등 ○ 현장 중심 찾아가는 사회보험 설명회 개최(계속) ○ 현장 예술인 공감 및 인식 제고 위한 실제 보상사례 발굴, 이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홍보 추진('26.3.~) - 국악방송 산재보험 홍보영상 송출('26.3.~)
44.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재구성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임에서 제외된 문학분야 위원을 선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제3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향 검토 중 ○ 문학분야를 포함한 제9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26.4.27.)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26.상반기)
45. 뮤지컬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뮤지컬산업진흥법 공청회 개최('25.12, 문체위)를 통해 국내외 뮤지컬산업 현황 파악 등 제정안 필요성 공감 <향후 추진계획> ○ '26년 하반기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 빠른 법령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46. 문화예술인 지원체계가 창작·공연·관객을 연결하는 문화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적 기반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단체 창작공연이 지역 공연시설을 통해 지역 관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추진('26년 265개 단체 선정, 652건 공연 예정) ○ 공연창작 및 유통·관객 향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위해 공연단체-유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25.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7.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상설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행안부와 의 직제 협의 등을 통해 담당 부서 및 인원 확대 노력 * ('24.5월)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정기직제 반영 위해 행안부에 신청하였으나, '과 단위로 운영하기엔 업무량 부족 사유'로 미반영 * ('25.2월) '26년 정기직제에 인력증원(3명)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전담부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하였으나,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원칙적 대통령령 사항으로 반대 의견 <향후 추진계획> ○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해 장애예술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48.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 재편을 논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악연구실 재편의 일환으로 '27년 정기직제시 국악연구과 신설을 요청함 <향후 추진계획> ○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의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특정 인물 중심의 화이트리스트 운영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제도 개편 완료 - 지원단체 및 심의위원 대상 심의제도 개선 설문조사('25.9.~10.)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5.10.31.) → 비상임위원의 심의 미참여 결정, 전담심의위원 사전 명단 공개 후 의견 청취 절차 도입, 심의위원 회피기준 개선 등 - '25년 심의위원 전원 대상 제척·회피 이행현황 조사 완료('26.2.~3.)
50.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교수의 과도한 겸직이 본업 소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겸직 및 외부 강의와 실기평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임교원 대상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 절차 지속 교육 중('25.12.~)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직 실태 등 문체부 감사 실시('25.12.~'26.4.)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26.5.) 및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26.하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51. 무용계 입시 비리 의혹 규명 및 예술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예술계 입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고 교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25.10.27.) ○ 예술고등학교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중(~'26.6.) - 교육부, 문체부, 예술고, 예술대학 등 예술계 입시 관련 전반 ○ '26년부터 대한무용협회 강습회 미실시토록 협의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 협력하여 조치 예정('26.하반기)
52. 예술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주관적 실기평가로 인한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 대응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고 교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25.10.27.) ○ 예술고등학교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중(~'26.6.) - 교육부, 문체부, 예술고, 예술대학 등 예술계 입시 관련 전반 ○ '26년부터 대한무용협회 강습회 미실시토록 협의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 협력하여 조치 예정('26.하반기)
53.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 내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신건강 진료 및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비* 증액(1천만원, 상담인력 8명) * 자체예산, '25년 25백만원 → '26년 35백만원 ○ 국립전통예술고 전담상담교사(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배치하여 심리적 위기 학생을 관리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27년도 정부 예산 확보 추진('26.4.~)
54. 예술교육 전반에서 드러난 입시 및 채용 비리, 교수 겸직 등의 관행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고 교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25.10.27.) ○ 예술고등학교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중(~'26.6.) - 교육부, 문체부, 예술고, 예술대학 등 예술계 입시 관련 전반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직 실태 등 문체부 감사 실시중('25.12.~) ○ '26년부터 대한무용협회 강습회 미실시토록 협의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 협력하여 조치 예정('26.하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55. 무용계 입시비리 의혹 등 예술 교육 전반에서 드러난 입시 및 채용 비리, 교수 겸직 등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입시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고 교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25.10.27.) ○ 예술고등학교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중(~'26.6.) - 교육부, 문체부, 예술고, 예술대학 등 예술계 입시 관련 전반 ○ '26년부터 대한무용협회 강습회 미실시토록 협의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 협력하여 조치 예정('26.하반기)
5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가상화폐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의원실 방문 현황 보고(문체부, '25.10.28.)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관련 법령 등 안내 공문 (문체부, '25.11.25.)
57.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공연을 확대하고 예술단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총 100개 지역 155회 지역공연 예정('26년) <향후 추진계획> ○ 국립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전 지속 검토 예정
58. '방판뮤직'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문화전문회사, 제작사, 방송사 간의 책임을 규명하고, 산하기관 간 현황을 공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방판뮤직' 관련 대규모 임금체불 사안에 대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25.10.) - 접수 창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체부로 사실조사 이관('25.11.) - 신고사건 조사 진행 중 ('25.11.~) ○ 의원실 방문 현황 보고(문체부, '25.10.28., '26.3.17.)
(지역문화정책관) 10건	
59.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조치완료)국립박물관 분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26년 예산 1,500백만원) ○ (조치 중)지역 거점도서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 추진 검토(국립중앙도서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 건립 및 분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국립 박물관 분관 건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6년, 연내 이행 완료 예정) ○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주제별·지역별 거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7년 예산확보 시)
60. 단순 수도권 구분이 아닌 인구 비중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내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취약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별 문화 공급과 수요 부분이 결합된 종합적 지수 측정 모델 개발 추진(‘26년 12월) <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지역문화지수 도출 등을 통해 파악된 지역의 문화현황 정책반영 및 추진(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61.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비 수도권 지역의 기존 문화인프라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립시설 조성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충남도청사 활용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타당성 재 조사(‘25.6~) ○ 경북도청사 활용 관련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발주(‘26.4. / 10억원) <향후 추진계획>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실시설계(‘27.1.~’12.) → 공사 계약 및 건축공사(‘28.~’30.) ○ 경북도청사 활용을 포함한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26년 12월)
62. 국가 전략에 맞추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 정책을 설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25년~) <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지역문화지수 개선방안 도출(‘26년 12월) ○ 지역 문화선도산업단지 신규 선정 통해 정주여건 개선 추진 (산업부, 국토부 합동)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63. 박물관 상품(굿즈) 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급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제작업체들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역 국립박물관 연계 공예상품 개발 및 제작('25.12.~'26.6.) ○ '26년 인건비 증액 및 인력 증원 <향후 추진계획> ○ 브랜딩, 마케팅 관련 컨설팅 추진('26.3.~7.) ○ 프리미엄 상품 패키지 디자인 및 개선 추진('26년, 연내 이행 완료 예정)
64. 국립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내 역사왜곡도서의 비치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립도서관이 소장자료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여 이용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설명('25.10.24. 의원실 방문 설명 완료)
65. 공공도서관의 일관성 없는 도서 선정·열람 기준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사서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국립중앙도서관)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계 현장 논의 등(광역대표도서관장회의, '26.6월)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운영 전반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 국고 보조율 확대를 지속 건의 중이며,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달 사업점검 지속 <향후 추진계획> ○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을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 예정이며, 건립사업 등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실행행률 제고 추진
67. 청와대재단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이 사비로 출연금을 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단 직원을 채용한 사안의 적절성을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출연금 공무원 부담 관련) 민법상 재단법인 출범 시 발기인의 기본재산 납부는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위임 공문시행 시 수임자로 지정된 문화예술정책실장(발기인(설립인) 중 1인)이 대표로 사비 출연한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① 청와대라는 특수한 국유재산을 관리할 기관을 출범하는 공익목적, ② 별도 예산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던 상황 감안하여 해당 공무원이 문체부 대표 자격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출범 시 기본재산 마련에 그 사비를 출연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공무원의 ‘영리법인’ 발기인 금지 조항은 있음 ○ (재단 직원 채용 관련) ‘23년 연도 중 청와대 관리 수임 대상 기관이 (구)문화재청에서 문체부로 변경(‘23.3.31.)된 후, 해당 연도 중에는 (구)문화재청 산하 (구)한국문화재단이 청와대 관리 수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문체부 소관 관리 기관이 부재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청와대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문체부에서 청와대재단 직원 채용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청와대라는 특수한 역사성·장소성이 있는 국가적 상징공간의 개방 및 보존을 관리할 특수 목적 수탁 기관의 출범 초기 필수 행정업무를 그 위탁 기관 자격으로 일부 지원한 것임 * (당시 참고 사례) 세계문자박물관 설립 당시 국어정책과에서 세계문자 박물관 직원 채용 공고를 한 사례를 참고
68. 강화도를 중심으로 고려사 관련 역사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향후 남북 공동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립박물관 분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26년 예산 1,5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 타당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으로 국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중장기 계획 마련(‘26.12월)
(문화산업정책관) 7건	
69. K-콘텐츠 펀드의 투자 부진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투자 기간 진행 중인 모태펀드 자펀드는 모두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투자 중이며, 문화계정 수익 배수는 1.4로 높은 수준 - 특히, ‘19~’24년 동안 청산된 문화계정 수익률 또한 과거 대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임 * (문화계정 수익률) (‘11~’15년) -2.11%→(‘16~’20년) +0.41%→(‘21~’25년) +8.53% ○ 정책펀드 조기 결성·투자 유인을 위한 민간 출자자 및 조기 결성 운용사 인센티브 확대 조치(‘26.1.23.) ○ 정책펀드 운용제한 일부 완화 및 M&A·세컨더리 펀드 신규 조성 등으로 수익률 제고 유도(‘26.1.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운용사 선정('26.4.20. 예정) 및 결성·투자 추진('26.下)
70.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연차 보고서가 장기간 미제출 상태 이므로 제출 절차를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보고서 제출 방식을 변경하여(실물 보고서 제출 → 시스템으로 제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국회 시스템을 통한 재제출 완료('25.10.24.) <향후 추진계획> ○ 정기 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하여 '2025년 기준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제출 예정
71. 문화기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연구기관 설립 논의를 진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화기술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가칭)한국문화기술개발원' 설립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구축형 R&D 문화기술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26년 12월)
72.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콘텐츠 전문 R&D 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유산 R&D를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문기관) 현재 부설기구인 문화체육관광진흥센터를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는 부설기관 형태의 “한국문화기획평가원”으로 출범('26.4월) ○ (중장기 예산확대) 문화체육관광 R&D 사업전략 추진('25.12월 완료)을 통한 전략적 예산 확대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문화유산 R&D)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콘텐츠 R&D 분야의 특성을 고려, 양 부처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
73. 콘텐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K-콘텐츠의 국내 IP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콘텐츠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산업 적합성을 높이고자 다장르·다층위 지원사업 확대·신설 완료('26년 지원사업 공고) *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가족형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다장르 음악 ○ 지원사업 개편 등을 통해 창·제작 등 국내 콘텐츠 IP를 확보하고, 우수 IP는 선별하여 2차 사업화 활용 촉진 지원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다장르·다층위 지원 및 IP 활성화 확대 추진
74.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콘텐츠진흥원의 해외파견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사무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원 확대 예산을 반영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재정경제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26.2월) * 재정경제부는 시행령 개정 요청이 많아 비과세 대상을 당장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콘진원 해외사무소 인원 확대를 위한 수시증원 요청('26.3월) ○ '2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26.4월) <향후 추진계획> ○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지속 요청 ○ 콘진원 해외사무소 정원 확대 및 예산 반영 지속 추진
75. 콘텐츠진흥원의 재원 운용방식과 관련해 출연금 구조로 전환하여 재정 성과 환수 강화 및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콘진원 출연금 전환 검토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콘텐츠미디어산업관(41건)	
76. 대중문화예술인 경호 과정에서 과잉경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국토부 주관 ‘(가칭)유명인 출국 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공항 등 혼잡해소 방안 논의 진행 중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안건으로 상정('25.10.24.), 국토부 협조 중 <향후 추진계획> ○ 협의체 논의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추진('26.5~9월) 및 기획사 대상 교육·홍보 및 행안부·경찰청·공항공사 등 유관부처 배포('26년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후) ○ 배포한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행안부·경찰청에 경비(경호)업체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확산 등 협조 요청('26년 연내)
77. 인권과 노동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실시('25.9.18.~12.31.) * 법률의 처벌조항 적용을 배제·제도면책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 유예조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현황·조치실적·관리계획 제출 및 조치 시 우리 부 통보 등 지자체 대상 협조요청 공문 발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적발 건에 대하여 지자체와 대응체계 구축 ○ 콘진원, 기획사 협·단체*와 협조하여 등록제도 홍보('26.上) *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8. 공연장 규모가 불충분하므로 기존의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을 전용하거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서 인프라를 확보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중음악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25.4~12월) ○ 대중음악 기획사, 시설, 협단체 등 의견수렴('25.11월~'26.2월)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처 협의('26.3~4월) * 수시배정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기획처 협의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사업 공모('26.2분기) 및 추진(3~4분기)
79. 5만석 규모 K-POP 아레나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내부 관계부서 TF 구성('26.1월) ○ 프로스포츠 및 대중음악 등 관계분야 의견수렴('26.1월~)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공연 복합형 돐구장 건립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27.上)
80.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건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반영된 남문과 조형물 등을 철거한 경위를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실시 후 의원실 보고 완료('25.12.30.) *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추진 적법성 여부 조사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종료 후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정산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환수 조치 예정('26.4월~)
81.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확장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된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실시 후 의원실 보고 완료('25.12.30.) *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추진 적법성 여부 조사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종료 후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정산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환수 조치 예정('26.4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2.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의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는지, 여수 MBC의 앵커기업 지정 과정이 타당한지 경위를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실시 후 의원실 보고 완료('25.12.30.) *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추진 적법성 여부 조사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종료 후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정산을 통해 위법 확인 시 환수 조치 예정('26.4월~)
83. 네이버 웹툰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신인 작가가 공정하게 데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체부·네이버웹툰·웹툰작가 노동조합 3자 간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 수렴('25.10.27.) ○ 만화진흥위원회 논의('25.11.28.)를 거쳐 네이버웹툰 자체 개선 조치 예정* * 신인 작가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26년부터 공모전 요강 명확화 및 계약 협의 시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 ○ 만화진흥위원회 후속 논의('26.4.3.) 및 지속 의견수렴 예정
84.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예인 기획사와 학원의 선납금 요구 등 불공정 영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현장조사) 학원형 기획사 현장실사(2회, 8개소) 및 관할 교육청 신고('25.10.27.~'25.11.20.) ○ (관계부처 협의) 교육부 소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미등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관할 교육청 합동 점검·단속 추진('25.11월)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평생학습과) 업무 협의('25.10.21.) ○ (신고창구 운영 등) 콘진원 내 신고창구(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등록 기획사 조사 및 공정위를 통한 불공정계약 조항 시정 권고(즉시) * 학원형 기획사 현황, 기획업 및 학원업 등록여부, 불공정계약 조항, 거짓약속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대중문화산업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26년) ○ (교육강화) 기획업자 대상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포함('26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40시간), 법정교육(최초 6시간, 연간 3시간) ** 불공정계약 및 피해사례 안내,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학원법」 준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5. 웹툰 산업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생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장려하고 창작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웹툰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계약관행 파악 및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창작자 보호장치 강화 * 만화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 분야의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차별·괴롭힘 등에 대한 대면 상담실 운영 중
86. 대형 연예기획사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방송 출연 제한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사실관계 확인) EXO멤버 시우민 사건 관련 기획사(원헌드레드) 측에 확인 결과, KBS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25.10.21.) ○ (신고창구 운영 등) 콘진원 내 신고창구(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방통위 소관 안내(즉시) <향후 추진계획> ○ (교육강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 과정에 기획사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 등 포함하여 교육('26년) * (예술인) 소양교육 /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40시간), 법정교육(최초 6시간, 연간 3시간) ** 불공정계약 및 피해사례 안내, 「방송법」 상 금지행위 준수 등
87. 풍자 만화 전시 사례와 관련하여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지원사업 만화영상진흥원 재이관 등 만화 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 만진원 지원예산: '25년 29억 → '26년 71억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및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시정권고 등 조치 가능
88.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축소와 상영관 부족 등 기반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정상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 예산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7억), 독립예술 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18억), 국내외 영화제 육성(+15억) 등 독립 예술영화 분야의 사업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음 ○ '독립예술영화 상영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규 도입하여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 부재 지역 일반 상영관을 활용한 독립예술 영화 정기 상영 프로그램 운영(18억 원, 60개 내외 상영관 지원 예정) <향후 추진계획> ○ 향후 '27년 예산 편성 시 독립예술영화 분야 지원 사업비의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89. 안무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성명표시 의무화 등 제도화 장치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안무 계약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25.3월) ○ 안무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25.4월) ○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 조정협의체 운영('25.5월~) <향후 추진계획> ○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조정 회의 및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90. 미국의 외국영화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영화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미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 감소, 공동 제작 치질 등 한국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 * '24년 기준 한국영화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0%(421만 달러)로, 관세 부과 시 일부 수출 감소는 예상되나 국내 영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글로벌 확장세, 브랜드 가치 및 한·미 공동제작·로케이션 유치 등에 일부 제약 가능성은 존재함 <향후 추진계획> ○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91. 글로벌 OTT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 구조 하에서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 증진을 위한 국내 OTT 통합 지원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융자 지속 및 확대 위한 '대출계정' 신설 완료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6.3.31.) ○ 제작사의 IP 확보를 전제로 한 국내 OTT 콘텐츠 제작비 지원 예산 확대('25년 303억원 → '26년 399억원)
92. 국내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OTT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내 대형 OTT사 티빙-웨이브 간 합병 추진 상황 파악 완료, 향후 업계 협의 지속
93.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는 영상 콘텐츠에 전통문화 등 K-컬처 요소를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적 가치를 반영한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통문화, K-컬처 등 한국적 가치' 반영 여부에 대한 가산점 공모에 반영(OTT특화콘텐츠 제작지원/'2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4. OTT와 방송드라마 분야의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방송·OTT 제작 종사자 업무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년~) <향후 추진계획> ○ OTT 표준계약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26년~)
95. K-POP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 공정한 팬미팅 구조와 개인정보 요구 등 부정적 관행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의 발단이 되는 압포 문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6.1.29.)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실시 중으로 추후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이행점검·확산 지원
96. 장기간 제작이 필수적인 애니 메이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도 협약과 예산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다년도(연속) 지원 확대 - 전년대비 연속지원 7편에서 10편으로 확대 운영
97. 콘텐츠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보고된 경우 즉시 부정수급 심 의위원회를 열어 제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및 수행배제 처분('25.11월)
98.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수익을 국내 영화 창· 제작을 위한 투자로 환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OTT 성장에 따른 영화·영상산업 체계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나, 진흥 및 규제 권한 관련 여러 부처의 이해가 얹혀있는 만큼 법률 개정방안 정책연구 등을 통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음 * 영상콘텐츠 통합 법제안 마련 연구('24.12.) **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섭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는 영비법 일부 개정안 발의('25.12.12. 임오경 의원, '25.1.5. 정연욱 의원) <향후 추진계획> ○ OTT 산업은 유료방송·통신 등 타 콘텐츠 영역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부과금 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각 업계별 입장을 감안하여,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영화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99. 영화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 사업의 예산을 복원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 예산에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예산 30억을 신규 반영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27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지속 편성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100. 글로벌 공동제작 로케이션 지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예산에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예산 30억을 신규 반영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 '27년 예산 편성 시 로케이션 관련 예산 복원을 추진할 계획임
101. 역사왜곡이나 피해자 모욕 간행물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원칙과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도서에 대한 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출판법령상 간행물 심의절차, 소송 판결 요지 등 설명('25.10.24. 의원실 설명 완료)
102.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 문제에 대해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26.1월/ '26.7월 시행 예정) -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도입,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부과 ○ 문체부 '26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초중고 670개소, 사회교육 기관 330개소) 실시 및 언론자율심의 지원
103. 정부광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신뢰성 판단 자료 제공 확대(요청 시 → 상시조회, '26.2월) 및 정부광고주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강화(연1회 → 월별, '26.1월) 조치 완료('25.10.23. 의원실 자료 제출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04.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신뢰성 판단 자료 제공 확대(요청 시 → 상시조회, '26.2월) 및 정부광고주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강화(연1회 → 월별, '26.1월) 조치 완료('25.10.23. 의원실 자료 제출 완료)
105. 공인(公人)에 대한 정의 및 명예훼손 보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공인 관련 언론보도 지침' 마련 후, 언론계 확산('25.10.23. 의원실 협의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자문단 구성·운영('26.3분기)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공인 보도준칙」 편람 제작·배포(~'26.12월)
106. 근거 없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26.1월/ '26.7월 시행 예정) - ▲온라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도입,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부과 ○ 문체부 '26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초중고 670개소, 사회교육 기관 330개소) 실시 및 언론자율심의 지원
107. 대전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 개선을 위해 대관료 인하와 경쟁 스튜디오 대비 특화전략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기본요금 인하 및 장기 대관 할인 등을 통해 대관 수요 확대 추진('26.1.1. 요금 조정 완료) ○ 국내 최대 규모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25.12.3.), 촬영 장르 다변화(예능, 유비 등) 등 특화 전략 마련
10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의 종교모임 강요와 공금 유용, 급여 부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법인 사무 운영 및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사무검사 실시('25.11.10.~11.14.) * 사무검사 결과 의원실 보고 완료('25.12.15.) <향후 추진계획> ○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출('26.3.31.까지) 및 이행 상황 지속 점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09.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영화인 역량 강화 교육 용역 사업에 지역영화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 사업(3개처 내외)을 운영하여 지역영화인 대상 사업을 추진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 지역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영화인 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 공고 및 교육 시행할 계획임(3개처 내외, '26. 8월~11월) ○ '27년 예산에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
110. 대형 공연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 공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중음악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25.4~12월) ○ 대중음악 기획사, 시설, 협단체 등 의견수렴('25.11월~'26.2월)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처 협의('26.3~4월) * 수시배정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기획처 협의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사업 공모('26.2분기) 및 추진(3~4분기) ○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7.上)
111. 대중문화예술 공연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본인 확인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의 발단이 되는 압표 문제 근절을 위한 「공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26.1.29.)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실시 중으로 추후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이행점검·확산 지원
112. 지방에 복합형 K-POP 아레나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관련 기초조사 예산반영('26년 8억)
113. 도서관에 비치된 사회 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재심의 등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한 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간윤위 심의 및 운영 규정상 이미 심의를 받은 동 도서관은 신청기간 도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명('25.10.31. 위원 대면 보고 설명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14. 대통령 풍자 카툰의 전시로 인한 만화진흥원의 만화 공모전 관련 예산 원상 복구 등 대안을 마련하고, 만화 전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지원사업 만화영상진흥원 재이관 등 만화 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 만진원 지원예산: '25년 29억 → '26년 71억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및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시정권고 등 조치 가능
115. 공연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 시설 준비뿐만 아니라, 기존 체육·음악 시설을 전문 공연장으로 개조·전용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중음악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25.4~12월) ○ 대중음악 기획사, 시설, 협단체 등 의견수렴('25.11월~'26.2월)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처 협의('26.3~4월) * 수시배정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기획처 협의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사업 공모('26.2분기) 및 추진(3~4분기)
11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단체지원 사업이 공익성을 잃은 채 극우 단체에 재택 심사·서면 의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단체지원 사업 관련 감사 계획 검토 <향후 추진계획> ○ 단체지원 사업 심사현황 파악 및 감사계획 수립(2분기)
저작권정책관(8건)	
117. 중국 내 국내 창작자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의원실 보고(4.17.) ○ 음악출판사 대리중개업 신고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25.10월) * 총 585개 중 176개 신고 **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악출판사가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행위는 자기관리 행위로 대리중개 신고 대상 아님 ○ 음악출판사 중국 저작권료 징수·분배현황 조사('25.11월~'26.4월) * 14개사 회신, '23년 기준 약 71억원 징수 <향후 추진계획> ○ 추가 현황 파악 및 해외 저작권료 미지급 신고 창구 운영('26.5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18.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내부 감사 규정을 왜곡한 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26.3월) - (내용) 시정명령 범위 확대,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26.10월)
1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경영, 외부 회사 설립을 통한 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26.3월) - (내용) 수수료율 인하 요구권 신설, 시정명령 범위 확대,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26.10월)
12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잔여 미분배금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체부) 제3자에 대한 잔여 미분배금 지급 절차 개선, 청구 관련 안내문 공고, 집중 청구기간 운영 등 시정명령('25.10월) ○ (음저협) 청구 관련 안내문 공고('25.11월) 및 집중 청구기간 운영('25.12월~'26.1월) * (청구 접수결과) ▲(청구인) 총 1,667명, ▲(청구건수) 총 638,502건 <향후 추진계획> ○ 잔여 미분배금 관리 및 활용 방안 의원실 보고('26.6월 이후)
12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소수 정회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26.3월) - (내용) 시정명령 범위 확대, 회원의 총회 의결권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26.10월)
1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부 감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독립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 검증 체계를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감사제도 개선안 마련('26.4월) - 감사보고서 문체부 제출 의무 및 허위 제출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의원실 보고 완료, 4.17)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단체 규정 개정(복수 후보 상정 의무화) ○ 법 개정 지원(의원실 발의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23. AI 시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와 입증 책임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AI 시대 저작권 제도 관련 논의 등을 위한 저작권 법제 정비단 발족('26.3.13.~) - AI 분과 1차 회의 개최('26.3.26.) <향후 추진계획> ○ AI 시대 저작권 제도 관련 논의 등을 위한 저작권 법제 정비단 운영 계속(~'26.11월)
1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불이행, 저작권료 배분 부실, 내부직원의 외부 회사 설립 문제, 내부감사 왜곡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감사 계획 수립 중 <향후 추진계획> ○ 음저협에 대한 문체부 감사 실시('26.9월 예정)
종무실(2건)	
125.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기구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 발의, 상임위 상정('25.1.10./11.17., 소위 회부), 「국제문화행사지원법」 제정('26.3.31., 본회의 통과) 등이 진행되었으나, 2027 행사의 특성상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 ○ 입법일정 등 감안, 법적 근거를 갖추기 보다는 정부 자체적으로 정부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25.8월~)이며, 관계부처별 소관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안 작성 중 <향후 추진계획> ○ 정부지원 기본계획 수립(~'26.6월) ○ 관계부처 합동지원 체계 마련 등 예정('26.8월~)
126. 전통사찰법의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현장의 혼선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통사찰법 개정 추진중 *민홍철의원 발의('26.1.6), 소위회부('26.2.23.) - 개정안 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내용 추가 * 특례규정 우선적용 명문화, 건축물 안전성 확인 조치 마련 - 국토부 이견 조율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이후 법안 국회 개최 시 중점법안으로 추진 -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26.6.~7.) - 법사위 의결('26.8.), 본회의 의결('26.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1건	
127.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보도검열관실이 제외되어 5·18 당시 역사적 상징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관련 공간이 소실되고, 사진 자료가 부재하여 원형 복원이 불가함에 따라 보도검열 관련 내용을 전시로 대체 구성 - (도청본관) 보도검열관실 사진 및 검열 신문 복제본 전시 - (도경본관) 신문 검열본과 삭제본 비교 전시 - 보도검열관실 위치 안내 패널 설치(개관시) - 보도검열 관련자 구술영상 제작(하반기)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연구 사업 추진 등(하반기)
(해외홍보정책관) 1건	
128.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본해 표기 및 독도 오기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시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영토표기 중요 사안에 대해 시정 서한 추가 발송('26.1월) ○ 동해·독도 표기 등 영토주권 사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외교부 등과 범부처 협력 추진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범부처 협의체인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영토표기 중요 사안 관련 논의 및 협력 요청('25.12월) * (안건명) 중요 미시정 사안(독도·동해 표기 오류 등)에 대해 기관 간 시정 협력 요청 - 동해·독도 표기 사안의 주관부처인 외교부 및 현지 거점인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에 중요 오류 사안 공유 및 시정 협력 요청('26.1월)
(관광정책관) 8건	
129.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주도하는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광역관광개발 가이드라인 제시(문체부, '26년 下)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관광개발 계획 수립(지자체, '27년 下) → 국가 계획 확정(문체부, '28)
130. 정권 초기에 한국관광공사의 기관장 인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박성혁 신임 사장 임명('25.1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31. 지속가능한관광도시 지정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지원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탄소저감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완료) 및 탄소발자국 시범조사 추진(~'26년) ○ 지자체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지원(~계속) 및 지자체 협조체계(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등) 운영('24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등, '25.5.발의) 입법 지원 및 관련 사업예산 확보 추진('25년~)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입법 지원 및 관련 사업예산 확보 추진 (계속)
132.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한국민속촌 직원의 허위 발주와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민간업체인 한국민속촌 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 ○ 문체부 및 관광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감독 철저히 하겠음
133. 한국관광공사의 특정 업체 수의 계약 집중체결 및 허위 현장실사보고서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체부 감사관실 감사 실시('25.10.~11.),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26.3.27.)
134.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위기에 대응하여 현실화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발의('25.12월,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 시행령 규정 사항이었던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공항 이용 시 2만원(현행 7천원), 항만 이용 시 1천원) ○ 관광분야(학·업계 등) 의견수렴('25.12월~) <향후 추진계획> ○ 국회 협의 등 법안 통과 추진 및 후속조치('26년 연내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35.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예산 투입 대비 관광객 감소 및 인근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 사례 등 막대한 비용 대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타당성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5회)을 통해 추진 방식을 마련하여 공모 및 선정 완료(~'26.2.) ○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타당성 등 검토
136. 성과가 저조한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베니키아 브랜드 민간이양 및 사업종료를 위한 필요 절차 시행중 - 브랜드 사용 실태조사 및 브랜드 가치 평가 실시 - 브랜드 민간이양 및 사업종료를 위한 법률 검토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베니키아 브랜드 매각 입찰 공고 시행('26.6월)
(국제관광정책관) 4건	
137. 카지노 사업장의 노동환경 관련하여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체부-제주도청 간 영상회의('25.10.22.) 및 대면회의('25.10.30.) 개최 ○ 손술 의원실 설명 및 협의('25.10.24./'26.1.7.) ○ 고용부*, 제주도청** 등 협력 지속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점검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및 반영 노력 지속 ** 제주도 카지노 영업장 실태점검 실시('25.12.20~) 지속 ○ 문체부-제주도청-카지노협회-노동조합 간 업무협약식 체결('26.3.30./손술의원실 참석) ○ '카지노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연구용역('26.3월~) *완료 후 배포 예정
138.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알선 관광이 불법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민관 공동 불법 성매매 관광 근절 캠페인 실시('25.10월) ○ 불법 성매매 알선 오픈채팅방 등 모니터링 및 신고강화, 불법행위 신고 창구 운영('25.10월/한국여행업협회) ○ 민형배 의원실 방문 및 설명('25.11.1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39. 중국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협력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단체객 무단이탈 및 사고 관련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조 및 공동 대응 * (법무부) 입국 규제자 사전 점검 / (문체부)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등 관리 ○ 불법체류율이 높을 경우(무단이탈 분기별 2% 이상), 저가 관광, 쇼핑강요 등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 중국 단체객 한시 무사증의 경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을 기존 5%→2% 수준으로 강화('25.9.7.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
140.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인한 대 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를 관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보증보험 미가입 여행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 요청('25.10월) ○ 지자체별 실태조사 실시 및 문체부 보고('25.10월)
(체 육 국) 36건	
141. 경기용 실탄과 총기 유출 사고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사격연맹의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파악하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경기용 탄피의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사격연맹 감사 실시(~'25.12월) 및 경기용 실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26년 예산 반영(920백만원), 사업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사격용 실탄 관리매뉴얼 마련 및 경기용 실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6.12월)
1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천 선수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관계자 실무협의, 협력사 및 근로자 의견청취 등('25.10.22., '26.1.23., '26.2.10.) 실시 <향후 추진계획> ○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27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26.12월)
143.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현장에서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타 예술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폐지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최저학력제 미달에 따른 대회출전 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개선 완료('24.12.) * (기존) 고등학교 선수 대상 보충학습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개선) 초중고 모든 선수 대상 보충학습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의무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44. 프로야구의 고가 시즌권과 선예매 확장으로 인한 암표 및 팬 소외 문제와 관련하여 티켓판매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1.29.) <향후 추진계획> ○ 선예매가 암표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예매의 부적절한 거래 제재방안 KBO와 논의('26년 3월) ○ (시행령 개정 연구) 개정 국체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기관 지정·운영·해제 조건,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 연구 추진('26년 상반기) ○ 정부 - 기관(암표신고센터) - 민간(티켓판매업자·온라인플랫폼사업자)-전문가(법률·IT) 간 민관 TF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 협의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26년 2월 ~)
14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의 암표와 매크로 예매로 인한 가격 폭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KBO와 협력하여 즉각적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1.29.)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개정 연구) 개정 국체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기관 지정·운영·해제 조건,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 연구 추진('26년 상반기) ○ 정부 - 기관(암표신고센터) - 민간(티켓판매업자·온라인플랫폼사업자)-전문가(법률·IT) 간 민관 TF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 협의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26년 2월 ~)
146.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신고센터 방식의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1.29.)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개정 연구) 개정 국체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기관 지정·운영·해제 조건,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 연구 추진('26년 상반기) ○ 정부 - 기관(암표신고센터) - 민간(티켓판매업자·온라인플랫폼사업자)-전문가(법률·IT) 간 민관 TF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 협의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26년 2월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47. 체육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생활체육 지원 공백과 지자체의 체육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 등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신속히 정상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대한체육회 사업 이관 관련 업무협약('25.12월) ○ '26년부터 지방체육 진흥 등 12개 사업을 이관, 대한체육회가 1차 보조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달체계 변경 조치 완료(629억원 규모)
148.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대한체육회 후원사에 대한 독점공급권 제도 관련 입장 변경으로 인한 선수단복 품질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고 품질 안정화 대책, 독점공급권 관련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선수단복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입찰 허용('25.7월) ○ 후원사 독점공급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오경 위원 대표 발의) 국회 통과 추진 중
149.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성과를 낸 비인기 육상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종목단체 예산지원 시 종합대회 성과 및 경기력 향상도 등을 종합반영하여 지원계획 수립('25.12월)
150. 프로야구 경기의 장애인석 확충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KBO와 협력하여 장애인석을 확대하고 민원창구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프로야구 경기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석 설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두 경기장에 대해서는 '25년도 안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요구('25.10.13.)하였으며, 기한 내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중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조치 계획에 따른 장애인석 확충 점검('26년 상반기)
151. 체육단체의 자체 징계 구조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징계 위원회 구성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조은희 위원 대표 발의) 국회 통과 추진 * 현재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는 기 전원 외부인사로 스포츠 공정 위원회 위원 구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2. 반복되는 체육계 미성년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5.11. / '26.5. 시행) ○ 폭력 가해혐의 선수 출전금지 강화 등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 위원회 규정」 개정('25.10.) ○ 체육단체 징계정보 활용 방안 등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5.11.~'26.3.) ○ 회원종목단체 임원 징계관할 상향(체육회 '25.12. 개정 / 종목단체 '26.1.) <향후 추진계획> ○ 체육계 폭력근절 캠페인(교육+홍보) 전개('26.연중) ○ 신고인 익명성 보장을 위한 광범위 포괄조사 체계 구축('26.1분기)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실효성 강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26. 연중)
153. 마라톤 대회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참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서약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참가자 서약서 배포 완료('25.12.2.) 및 마라톤 대회 매뉴얼 개발 연구 추진 <향후 추진계획> ○ 마라톤 대회 매뉴얼 개발 및 배포('26년)
154.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위반, 청년 인턴 장기간 근로 등 노동권 침해의혹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근로환경 문제, 노동조합 탄압문제 세부내용 검토 - 현재 지노위 판정서 송달에 대한 중노위 재심 진행 중 -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KPGA 인턴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시정 요청('25.11.27.)하였고, 관리·감독 중 <향후 추진계획> ○ 중노위 재심에 대한 KPGA 입장에 따라, 노동 문제 검토 예정('26년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55. 야외 골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골프장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회의 실시(4.10.) <향후 추진계획> ○ 캐디 안전·인권 증진 내용 포함, 골프장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 추진 ('26년 상반기)
156.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 야구 한국시리즈 VIP 초청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와 승인 절차를 공개하고, 블랙리스트·횡령·학교폭력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의전·초청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야구 위원회 사무검사 진행('25.11.10. ~ '26.1.9.) - ▲기관회계(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등 법인운영, ▲한국시리즈 외빈 초청 등 전반 검사 - 사무검사 처분 결과 한국야구 위원회 통보 완료('26.4.1.)
157.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스포츠공정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축구협회를 조사하고, 체육단체 전체에 적용할 표준화된 공정위원회 운영 지침을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합동 특정감사 실시('26. 1~2월) 및 처분요구(3월) ○ 스포츠공정위원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안) 마련 및 체육단체 대상 의견 수렴('26.2월)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공정위원회 지침(안) 체육단체 배포
158. 체육 예산 증가율이 0.3%로 저조하므로 국민 생활체육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 국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안 대비 192억원(생활체육 88억원, 전문체육 37억, 스포츠산업 13억, 국제스포츠 28억, 장애인체육 26억) 추가 증액반영 완료, '25년 체육 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
159. 국비로 건립된 장흥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개소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장흥 인재개발원 개원('25.12월) 및 '26년도 체육인 교육사업 예산 확보* 등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 후보선수 육성(450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특화교육(600백만원), 체육인 역량강화(808백만원)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0.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진행중 * 의원발의('25.12.8.)→문체위 상정('26.2.23.)→문체위 의결('26.2.26.) ○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장기근속수당(신설) 예산반영 노력 * '26년 본예산 국회 증액 노력(문체위 의결('25.11.17.)), 최종 미반영), '26년 추경 국회 증액 노력(문체위 의결('26.4.6.)), 최종 미반영)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 정부안에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장기근속수당 신설 반영 노력('26.상)
161.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명확히 역할 분담을 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와 논의하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및 이전 계획을 마련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철거 및 이전계획 수립 (~'26.12월)
162. 대한근대5종연맹의 부적절한 운영과 인사 비위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미비한 조치를 보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감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종결 및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및 일부 회신('25.2., '25.9.) -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어 동일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의 발견, 조사 과정의 중대한 하자(증거서류의 위·변조 등), 조사 결과에 영향이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있어야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추후, 대한근대5종연맹에 대한 인권침해나 비리 등 사항이 신고되면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결과 미회신건 조치 재요청 * 기관경고(1건), 징계요구(1건) 미회신 ○ 대한근대5종연맹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걱정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26.上)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3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3. 야구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경기장 관리주체(지자체 등)와 운영주체(구단 등) 간 안전관리 책임·권한 명확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운영협약 모델’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표준운영협약 모델 마련 및 활용 권고('26. 상반기)
164. KBO 허구연 총재의 법인카드 사용 및 해외 출장 관리, 회계 투명성, 국회 자료 제출 태도 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점검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야구 위원회 사무검사 진행('25.11.10. ~ '26.1.9.) - ▲기관회계(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등 법인운영, ▲한국시리즈 외빈 초청 등 전반 검사 - 사무검사 처분 결과 한국야구 위원회 통보 완료('26.4.1.)
165.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 조사관 비율 증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중대폭력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조사팀 신설('25.11.) ○ 조사관 인력 증원(21명→39명) 및 여성조사관 인력 확대(6명→10명) * 전년 대비 여성조사관 66.7% 증원('26.2.기준) <향후 추진계획> ○ 대통령 지시사항('25.11.11.) 연계, 권역별 상임인권보호관 도입 등 위한 예산 반영('27년 예산) ○ 여성조사관 인력 확대를 위한 조사관 증원 요구 및 조사관 신규 채용 시 여성조사관 확보 노력
166. 선수들의 훈련공백 방지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완공 후 이전 및 철거 원칙을 준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및 이전계획 수립 시, 대체시설 건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겠음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관련 대한체육회와 대체시설 완공 후 이전 방안에 대해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철거 및 이전계획 수립 (~'26.12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67. 승강제 리그 시스템 구축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종목단체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직무 교육 실시 - (대상) 중앙종목단체 및 시도종목협회 담당자 100여명 - (내용) 공문서 작성, 회계 관리, 지역 리그 운영 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스포츠안전 등 * '26.2월 교육영상 제작, 3~6월 온라인 교육 실시 - 승강제리그 종목단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26.6월)
168. 스포츠 과학원의 R&D 사업의 특정 연구카르텔이 허위 인력 등재,페이백 등 조직적인 연구비 부정 수령의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 제도 도입 완료 - 협약체결 시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의무 서약서' 제출 의무화 <향후 추진계획> ○ 부정 집행 대상 과제에 대해 전수 정밀정산 실시 예정(~'26.12) ○ 감사원 감사 실시로,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169. 프로축구 오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종목단체 지원금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프로축구 오심 근절 등을 포함한 프로축구 성장 위원회 운영('26년 2월~)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에서 공정성 강화방안 등 논의예정('26년 중)
170.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자격' 심판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민간자격 미운영 단체 현황조사 실시 및 등록 관련 교육부 협의('25.11월) ○ 종목단체 대상 민간자격 신규 등록 조치(~'26.2월) 및 지속 모니터링
171.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생활체육 종목인 한궁의 국가적 육성과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한궁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생활체육 종목 육성은 공모 절차에 따른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강원도 한궁교실이 선정되어 지원 추진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72.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및 기관경고 불복 재심 절차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체육회 공정위의 기관경고 부적절 의견에 대해 스포츠 윤리센터 통보('25.12.9.) <향후 추진계획> ○ 윤리센터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173. 대한체육회장의 공적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 자체예산, 보조금 등 편성확인 및 진행내역 점검 <향후 추진계획> ○ 자체예산,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등 관리에 관리·감독 강화 노력(계속) ○ 감사인원 확충 등 내부 감시·감독기능 강화
174. 지자체와 스포츠단이 스포츠 경기를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현수막 반입 방지 관련 축구협회 K3, K4리그 대회운영 규정 내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 완료('26.3월) * 예방교육 및 현장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 <향후 추진계획> ○ 종목단체 대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예정
175.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체육회 차원의 노동인권 교육 및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지침 개정·시행(~'26.4월) *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는 문구 삽입 및 시군구체육회 임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현황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 지표(인센티브 지급 부문)와 연계 등 <향후 추진계획> ○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26 연중) * 집합직무교육 활용 인권침해 실태 점검('26.상)→사례화 매뉴얼 작성 및 배포('26.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76. 호남 지역의 레저시설이 전무하므로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공체육시설 예산 등이 지역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인구수 등 지역별 수요에 기반하여 공모를 통해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모사업 평가 중 동점 발생시 처리 기준으로 지역별 안배 고려 조치
(체육협력관) 10건	
177. 장애인스포츠클럽 기반여건 개선을 위해 대한체육회 종합 시스템 공동 활용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대한체육회에서 기 구축한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장애인스포츠클럽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간(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협의를 통해 시스템 공동사용 합의(2차관 주재/25.10.21.) * '22년~'25년, 총 159억원 소요 ○ 관계기관 간 논의결과에 대해 의원실 방문 설명('25.10.28.) ○ '26~'30년 중기사업계획 내 장애인스포츠클럽 시스템 공동사용 관련 예산 제출('26.1월)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사용을 위한 시스템 일부 기능개선(장애인접근성 강화, 개인정보 분리조치 등) 및 운영 연동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178. 88 서울 패럴림픽 기념요소를 올림픽 공원 기념사업에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패럴림픽 기념사업 기반 마련 <향후 추진계획> ○ 국립스포츠박물관 내 패럴림픽 유산 전시 추진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올림픽 레거시 사업 확대 ○ 올림픽공원 내 기념시설물 정비
179. 전북도 올림픽 유치가 국정 과제에서 제외되어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북도가 대회 유치 승인 신청('26.2.19.), 개최계획서 및 사전타당성조사 자료 등 재제출('26.4.14.)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문체부의 정부심의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전주 하계올림픽 대회 개최계획과 사전타당성 조사 보완·검토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0. 전북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자체 및 대한체육회와 협업하고, 유치계획의 로드맵을 공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정부와 지자체, 대한체육회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추진 중('25.3월 ~) ○ 전북도가 대회 유치 승인 신청('26.2.19.), 개최계획서 및 사전타당성조사 자료 등 재제출('26.4.14.)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문체부의 정부심의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전주 하계올림픽 대회 개최계획과 사전타당성 조사 보완·검토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심의
181.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예산의 지방 부담 비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정부와 지자체, 대한체육회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추진 중('25.3월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예산의 지방부담 비율 논의 시,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182. 제주 장애인체전 필수인력의 항공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열악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제주 장애인체전 필수인력 항공료는 '26년 정부안에 미반영된 상태로 8월 말 국회 제출되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실 설명 및 기획예산처 협의하였으나 최종 미반영(기여처 협의 '25.11.3., 의원실 설명 '25.11.4.~5.) <향후 추진계획> ○ 예산 범위 내에서 대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과 협의 진행 중('26.4월)
183. 패럴림픽과 장애인체전의 중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와 협력하여 보편적 시청권 항목에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고시 개정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중계확대 방안 검토 및 방미통위 협의('25.12월) ○ '패럴림픽 중계확대를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대한장애인 체육회) 실시('25.11.25.~12.1.) ○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방미통위에 패럴림픽 포함 의견 제출('26.3.25.) <향후 추진계획> ○ 패럴림픽 중계확대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속 협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4.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농아인·시각장애인연맹 간 예산 격차 문제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015년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통합 후 사업 대폭 확대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인력·예산 증가, 국제대회 참가 시 예산 증가(의원실 설명, '25.11.4.) ○ '26~'30년 중기사업계획 내 유형별 장애인단체 예산 증액안 제출 <향후 추진계획> ○ 2027년 장애유형별단체 신규·증액 사업 발굴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 증액 노력
185. 일본 올림픽박물관이 조선인 선수들을 '일본 선수'로 표기한 오류 시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도록 지속적 외교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계기 문체부 제2차관-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 면담시, JOC 도쿄올림픽 박물관 내 손기정 선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병기 조치 요구('25.12.4.) <향후 추진계획> ○ 2026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및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 등 주요 계기 활용 일본 정부·JOC 대상 협의 지속
186. 체육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음악경연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중 집행한 문제에 대해 감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관 등 검토 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체육기금의 목적 등 고려할 때 2026년 사업계획 승인 시 예술부문(265백만원)을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내 타 체육사업으로 조정(의원실 설명, '25.11.4.) ○ 문체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예산지원 방안이 논의·의결되었으나, 이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 미반영된 상태로 2026년 예산 최종 의결 ○ 예산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에 따라 보조금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로 직접 교부하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시 체육 분야에 한정하여 국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27년 부처안 수립 시 예산교부 방식 검토 예정

<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87.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의 부적절한 겸직, 입시 개입 의혹 및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임교원 대상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 절차 지속 안내('25.12월 겸직, 외부강의 등 안내 매뉴얼 제작·배포)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 내부감사 추진 중,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및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26.12.)
188. 성기숙 교수의 전통예술원장 선출 시 인사위원회의 형식화 문제 조사 및 논란 인사 임명 관련 인사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소명자료 제출('25.10.) 및 문체부 내부감사 추진('25.12.~)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26.12.)
189. 입학심사 과정에서 예술고등학교 강의 및 입시위원 불법참여 등 제척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입시관리를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입학심사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중('26.4.~) <향후 추진계획>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지침'에 따라 회피신고 및 배제가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
190. 교수 임용 후보자의 허위 경력 제출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를 비롯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교수 임용 후보자 경력사항 소명 완료('25.12.) <향후 추진계획> ○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교무행정 운영
191. 성비위 등 중대 징계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전임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연중 실시, 매 학기 강의계획서 작성 전 사전 이수 의무화하여 운영 중 ○ 표준강의계획서에 인권준수 서약서를 포함하여 인권보호 경각심 제고(한예중 학사내규 서식 제1호/'25.9.20. 개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전공 간 전과 절차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관련 서류 제출 및 소명 완료('25.10.23.) <향후 추진계획> ○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학사행정 운영
193. 실제로는 박사 학위가 아닌 실무 교육만을 이수한 자가 한예종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할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해당교수 학위 조회를 통해 박사 학위 취득 내역 확인 완료(~'26.2.) <향후 추진계획> ○ 전임교원임용 등 관련 내용 검증 철저
194. 석·박사 과정 수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캠퍼스 이전·통합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한예종 설치법안 발의(김예지 의원 대표/'25.6.11.) ○ 의릉복원계획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26.4.2.) <향후 추진계획> ○ 대내외 설치법 제정 필요성 지속 설명 및 입법 절차 대응 ○ 캠퍼스 이전은 재정 부담, 예술학교의 특수성, 교육여건,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국립중앙박물관】 1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5.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내 장애인 관람객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장애 유형별 관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13개 전 소속박물관, 장애인 관람객 통계 관리 실시('25.11.~)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소속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또는 특별전시 개최 시 장애 관람객 지원 콘텐츠 확대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96. 국립박물관 내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을 전수조사하고, 부적정 시설의 경우 이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중박 및 소속박물관 점자블록 전수조사 완료('25.10.) - 경주박물관을 제외한 13개 박물관 적정 설치 확인 - 경주박물관 장애인 접근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완료('26.4.) <향후 추진계획> ○ 경주박물관 점자블록 교체 공사 시행('26년 중)
197.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운송 용역이 공정한 선정 기준과 객관적 입찰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중앙 및 소속박물관 유물 운송 계약 현황('23~'25년) 의원실 보고 완료('25.11.) <향후 추진계획> ○ 유물의 안전 운송을 기본으로 공정한 기회 부여 예정
198. 국외 전시 추진 시 국외 조사 및 공동 연구를 수행, 연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단기 현지 조사 실시 및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 - 협의 출장 시 조사 병행, 연구결과 활용(도록 등) <향후 추진계획> ○ '27년 국외전시 조사연구비 증액 추진(기획예산처 협의)
199. 보존과학센터의 유물 보존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보존과학센터 건립('25.10.28.) 개관 관련 증원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24년 2명, '25년 2명) <향후 추진계획> ○ 보존과학 전문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지속 추진 예정
200. 수장고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재난 발생 시 유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보관 매뉴얼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 중장기 계획 마련('25년) ○ 재난 발생 대비 유물 안전 확보 - 주기적 직원 교육 실시 및 수장고 내 재난안전 장비 설치 <향후 추진계획> ○ 국립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27년~'36년 10개년 계획 기반 예산 확보 추진 중 ○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01. 성덕대왕신종 타종 재개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보존·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타음 조사 실시('25. 9.) <향후 추진계획> ○ 항구적 보존 대책으로 신종관 건립 추진 ○ 향후 4년간 조사연구 및 타종 데이터 축적('26.9 2차 조사 예정)
202. 학예 전문인력 비율을 제고하고 유물구입 예산을 확충하여 관람객 유치를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7년 정기직제 요구 시 학예인력 증원 요청('26.3.) ○ 중요 문화유산 확보를 위한 '26년 유물구입 예산 증액 - ('25년) 28.4억원 → ('26년) 48.7억원 <향후 추진계획> ○ '26년 정기직제 반영 학예직 2명 채용 예정('26.下) ○ '27년 정기직제 증원 및 '27년 유물구입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예정
203.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박물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방박물관 브랜드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시 개최 및 콘텐츠 개발 * ('26년) 경주박물관 등 13개 소속박물관 21건 추진 예정 - 지역 공립박물관 대상 국보·보물 순회전시 운영 * ('26년) 진천중박물관 등 6개 공립박물관 순회전시 개최 예정 ○ 전국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대상 교육 운영 - 국·공립박물관 전문인력 대상 '뮤지엄 아카데미'운영 ('25년 58회 3,643명 참여 *온라인강의 13,187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전시 개최 규모 단계'적 확충 계획 -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 예정 ○ 전국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대상 '뮤지엄 아카데미'운영 - '26년도 참여기관 확대 운영(국·공립·대학박물관)
204. 외국인 관람객 유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활용과 각종 부대행사 및 공연,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전* 개최 *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 외국인 관람객 유입 확대를 위해 블랙핑크, BTS 등 K-pop 대표 아이콘들과의 협업 진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적 공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시 개최 예정 * 동남아 K-컬처 네트워크 중심점인 태국 문화와 미술을 소개하는 ‘태국미술’,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우리들의 밥상’, K-컬처의 뿌리인 한국미술품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국미술 5,000년’ 등 ○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등) 협력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추진
205. 관람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므로 유료화 전환 검토 및 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관람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26.3.) ○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추가 소요예산 추경 반영(‘26.4.) <향후 추진계획> ○ 예약 및 고객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6.12.)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유료 전환시기 및 방법 등 협의 예정
206. 관람객 급증 대비 중앙박물관 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굿즈 등 박물관 활성화 성공사례를 지역박물관으로 확산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관리 대책 마련 - 주차요금 현실화(‘25.9.), 모범운전자 추가 배치 및 용산경찰서 인력 지원을 통한 교통정리 -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차장(약 150면)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개설 협의 완료(‘25.9.) ○ 지역 국립박물관 유물 활용 상품 개발 및 발굴 추진(‘25년) * (경주박물관) APEC 2025 KOREA 기념, ‘금관’ 상품 개발 및 발굴(25종),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상품 개발 및 발굴(101종) <향후 추진계획> ○ 용산어린이정원 주차장 공동 활용 및 유희공간을 활용한 카페 설치를 통해 관람객 편의시설 추가 확보(‘26.7~8월) ○ 지역 국립박물관 대표유물 활용 자체 상품 개발·출시(13개관), 지역박물관 주제 상품공모(연 2회) 진행 예정
207. 관람 환경 개선 및 프리미엄 전시 확대를 위해 유연한 가격 체계의 유료화 도입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관람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26.3.) ○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추가 소요예산 추경 반영(‘2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예약 및 고객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6.12.)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유료 전환시기 및 방법 등 협의 예정
20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한 송광사 오불도의 보물 지정 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송광사 오불도 지정조사 완료('26.3.9.) - 국가유산청 및 문화유산위원 지정조사 실시 및 협조 <향후 추진계획> ○ 국가유산청의 지정문화유산 심의절차 협조 예정
209. 전통문화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 확대 실시계획 <향후 추진계획> ○ 2026 국중박 분장놀이 공고 및 예선(6~7월), 소속박물관 권역 본선(9월), 중앙박물관 결선(9월)
210. 대통령실의 문화정책 수립·추진 시 중앙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국정과제(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이행을 위해 K-뮤지엄 세계화 등 관련 사업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국정과제 적극 추진 계획
211. 고조선 관련 전시 비중을 확대하고 서술 콘텐츠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선사고대관 개편 시 고조선 강조 및 전시품 다양성 확보('25.2.) - 전시 영역 중 고대가 시작되는 위치에 고조선을 배치 - 신규 발굴 자료 추가, 실질적인 전시품 수량 증가 ○ 고조선과 관련한 보조 자료 추가 설치 완료 - '단군왕검과 고조선' 패널 설치('25.9.) - 고조선의 청동기인 '비파형동검 분포 지도' 추가 설치('25.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2. 국립진주박물관의 ‘화력조선’ 콘텐츠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호응을 얻는 등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립박물관이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방박물관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화력조선’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25년 1억→’26년 1.4억) <향후 추진계획> ○ 국립 지방박물관의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추진

【국립국어원】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3.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시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한국수어사전> 등재 차별적 수어 표현 서비스 잠정 중단 (게이, 레즈비언 등 15건) (‘25년 11월) ○ 사전의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에 포함된 차별적 표현 전체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26년 상반기) <향후 추진계획> ○ <한국수어누리사전> 2차 개통 시 성소수자 관련 수어 표현 사전 등재(’27년 하반기)
214. 서울시의 주요 정책 명칭에 외국어 사용과 어문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시정 조치를 권고함과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시 국립국어원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공언어 개선 협의) 서울시 ‘러너 스테이션’ 사례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관 대상 협의(’25~) ○ (공공언어 평가 개선) ▲공공기관 등 대상 공공언어 평가 설명회 개최(’26.3.10.), ▲공공기관 등 대상 평가 결과 전달 체계 다각화(’25년 평가 결과부터 적용, ’26.4월), ▲공공언어 평가 관련 교육자료 배포(상시) <향후 추진계획> ○ ▲공공언어 평가 지표 개선(’26), ▲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평가 시스템 개발(’26), ▲평가 결과 미흡 기관 대상 교육 지원(’26)

【국립중앙도서관】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5. 역사 편향 및 왜곡 서술 논란이 제기된 사회 교과서의 국·공립 도서관 비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국·공립 도서관에 양질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사서교육훈련 운영 - 집합교육: 「도서관 장서관리」 과정 운영('26. 9월) - 마이크로러닝교육: 「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의 이해·장서개발」, 「장서개발 및 관리」, 「작은도서관 장서관리」 콘텐츠 제공(연중 상시) - 이러닝교육: 「장서관리」 과정 개발 예정('26년 하반기) ○ 지역자료수집협의회 총회('26. 4월) 및 워크숍('26. 9월)을 통한 광역대표도서관(17개관) 교육
2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장기화된 반복 공사로 이용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 운영 방식과 이용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사기간 운영방식 개선 - 사전안내(최소 2주전) 및 비성수기(휴관일 등) 시공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25.10월~) ○ 이용 공간 활성화 계획 및 개선 - (휴담소 안전체계 강화) CCTV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토·일요일 상주 근무 인력 배치,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등을 통해 안전체계 강화('25.10월~) - (작가 및 방문자 이용공간 활성화) 그림책 작가 창작실 이용통계 분석, 창작실 이용지침 수립·시행('25.12.19.)
217. 국립중앙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조치완료) '25년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동(生動)하는 도서관'을 선정·진행(시상(8점), 사례집 발간·배포(1,200부/1,122개처)) ○ (조치완료) <서초책있는거리> 독서문화축제지원('25년/2회) ○ (조치 중) 가속화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성찰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 주제 강연 및 북토크 등 문화 프로그램 개최(월 1회)

【국립장애인도서관】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18.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을 위해 전자책·AI 활용 공공간행물 제작 등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026년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읽기쉬운책 제작사업」 내 읽기쉬운책 전자책 제작(160종) 및 서비스 추진 중 ○ AI를 활용한 읽기쉬운 콘텐츠 자동생성 솔루션 도입 검토(4월) <향후 추진계획> ○ 읽기쉬운책 전자책(160종)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서비스(12월) ○ “장애 분야 정책자료” 읽기쉬운 콘텐츠 자동생성 솔루션 도입 및 서비스 방안 수립(예산확보 필요)
219.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독립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관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정(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0. 미술품 운송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경쟁과 산업 육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미술품 운송용역 입찰 참가기회 관련 점검 결과('25.10.), '국제물류주선업' 및 '일반화물차운송사업'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가 기회 부여 중 - 최근 3년간 운송 용역 업체 분석 결과,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총 9건 입찰, 수주 업체 현황) A업체 3건, B업체 3건, C업체 1건, D업체 1건, E업체 1건 ○ 작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내 다양한 규모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입찰 공고시 공동수급 허용('2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1. 흥행 전시가 외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체 기획 및 큐레이션 역량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025년 <론뮤익>, 2026년 <데미언 허스트> 전시 등 주요 흥행 전시의 경우, 외부 소유 작품의 전시이긴 하나, - 외부 전시를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자체 기획으로 조사, 연구, 작품 선정 등을 통해 전시를 운영 중임 - 앞으로도 당관이 추진하는 모든 전시에 대해, 자체 기획 중심의 전시 운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음

【한국정책방송원】 10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2. 비상계엄 국면에서 KTV가 편파적으로 언론에 영상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허위 해명한 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5년 국감장에서 KTV 원장(직무대리)의 공식 사과('25.10.20.) ○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 조치('26.1.) ○ KTV 사과문(홈페이지) 게재 및 사과 방송(KTV 대한뉴스) 진행('26.2.19.)
2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국악공연에 대한 '무관중 공연'으로의 허위설명과 행사 기획 책임자 인사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본부 감사 결과로 관련자 4명 징계 처분('26.3.10.)
224. 전례가 없는 청와대 관람 공연 제작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책임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본부 감사 결과로 관련자 4명 징계 처분('26.3.10.)
225. 게임 위법성 지적 내용 자막에 대한 원장의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본부 감사 결과로 관련자 3명 중징계 처분('25.11.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26. 언론사에 대한 영상 제공 중단 및 유튜브 채널 고소·고발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소송비 국고 환수 및 구상권에 대하여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언론사 대상 영상 제공 중단 사안은 당사자 간 화해·조정을 통해 원만히 종결 처리 완료 ○ 유튜브 채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사법 절차에 따라 불기소(1건) 및 고소 취하(1건)로 각각 종결 처리 완료 ○ 유튜브 채널 고소·고발 관련 소송비 국고환수 및 구상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국고환수 및 구상권 청구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추진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사례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국민 우선의 정책 운영체계를 정립·이행 - KTV 공공 아카이브 기반 대국민 영상 개방 정책을 지속 확대·강화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상 제공 및 분쟁 대응 관련 내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227. KTV 前원장의 배임죄 등 혐의에 대한 고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법률자문 결과 배임죄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추진
228. 계엄 동조 보도 및 이에 따른 원장 직위해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송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사과문) KTV 홈페이지 게재(KTV 소식-공지사항) ○ (사과방송) KTV 대한뉴스(종합뉴스 19:00~19:40/22:00~22:40) - 아나운서 클로징멘트 및 사과문 그래픽 처리 고지 방송(2.19.)
229. 수어통역자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수어 통역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장애인 방송 프리랜서 근로계약 기간 준수 등 관리강화 ○ '26년 수어용역 발주 시 농인통역사 근로계약 체결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방송 평가회의 개최 등 품질개선 노력 ○ '27년 장애인방송 용역 제도 개선(~'26.下) - 적격심사 낙찰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30. KTV가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닌 대통령 홍보를 넘어 총리의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부 부처 주요 정책 정보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KTV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정책소통 콘텐츠 강화, 국정영상기록 보존, 대국민 영상 저작물 개방 제도개선 추진 등
231. 성추행 혐의 있고 근무태도 부적절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도 성과 상여금 등에 적극 반영 조치('26.3월)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 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3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탁 기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수에 관한 자체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실시 - 기간: '25.10월 ~ 11월 - 대상: 지역센터 4개소(세종충북, 경북, 경기남부, 제주센터) - 내용: '24년도 예산집행내역 점검(대성회계법인 동반 점검) - 결과: 보조금 계좌관리, 집행·정산, 증빙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미흡 ○ 민간상담기관 선정 시 부정수급 관련 조치계획을 담은 「민간상담 기관 운영관리 규정」 제정('26.4월)
233. 해외복권 구매대행에 대한 허위광고를 차단하고 사업자들이 주소만 옮겨서 재개설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감시 강화 및 범정부 대처 - 경찰청·기재부 복권위원회·방미심위 업무 협조 강화 - 복권위원회, 동행복권과 불법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25.12.10./12.16.) ○ 복권법 개정 관련 사감위 의견 정연욱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향후 추진계획> ○ 복권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복권법 법안의 신속 통과 적극 지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 '26.3.11.) ○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감시 지속
23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면 심의 도입 및 범부처 공조를 포함한 근본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6.2.19.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에 불법 도박 정보가 포함되어 향후 신속 차단 처리
235. 청소년의 소액 결제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요소를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청소년 게임 제공업(뽑기류) 관리 주체인 문체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25.10.22.)
236. 소싸움 사행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부터 소싸움 경기에 대한 점검 계획 확대(분기 1회→격월) <향후 추진계획> ○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37. 불법도박 플랫폼과 로또 판매 한도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로또 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매월 소관부처와 사업자에게 송부하여 개선토록 조치 중 ○ 복권위원회에 로또 판매점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 협조 요청('25.12.) ○ 복권위원회, 동행복권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문제 공유 및 복권법 개정 방안 협의('25.12.10./12.16.) <향후 추진계획> ○ 로또 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지자체와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로또 판매점에 대한 점검 강화
238.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중독 치유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사감위법 개정(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 및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26.5.11.~5.17.) 및)을 계기로 관계기관(교육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하여 예방교육 확대 및 치유서비스 체계적 운영
239.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 유인책에 대한 실효적 단속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6.2.19.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에 불법 도박 정보가 포함되어 향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처리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 강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박 사이트 감시 강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협조 요청 - 수사기관·사행산업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향후 추진계획>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감시 지속 ○ 도박이용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에 적극 지원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원장의 해외출장 승인 기준을 재정비 하고, 공적 출장과 개인 일정이 결합된 여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조치완료) 복무규정 개정('26.4.6.) -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국외출장 관리 세부 기준을 「복무규정」 내 명시, 원장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출장 책임성 제고 및 대외 신뢰도 확보
24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인사 시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절차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관」 및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문화예술·문화산업·미디어·관광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25.12.22.)

【세종학당재단】 7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2. 세종한국어평가의 직영 전환 로드맵과 민간위탁 최소화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세종한국어평가 시행·채점·출제 지침 등 내부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 마련('25.8월) ○ 세종한국어평가 공공성, 품질 관리, 내부 역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직영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의원실 방문 설명('25.10월)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직영 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27년)
243. 지역별 수강생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적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세종학당 위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수강생 수 감소 원인 분석 및 밀착 컨설팅('26.2월) * 정상-주의-경계 단계로 분류, 분기별 수강생 수 조사 결과 전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10% 이상 하락한 학당은 현장 방문 컨설팅 등 운영 개선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거점 세종학당 월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륙별·국가별 현지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맞춤형 수요 대응을 위한 거점별 특성화 사업 추진('26.2월) ○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시, 한국어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 추진(~'26.6월) *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및 한국어 학습 경험과 의향을 교차 분석하여 수요지역 도출, 신규 지정 심사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세종학당 전략적 확대 필요 지역 대상 신규 운영 기관 선정 발표('26.6월) ○ 세종학당 운영평가 우수 학당 분석 추진 및 사업 추진 시 반영('26.12월)
244. 해외파견 교원에 대한 예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해외 파견교원의 급여 상향('25년 대비 약 5.3% 인상) 및 현지 복무 지원을 위한 담당 인력(3명→4명) 추가 배치 완료
245. 한국어 학습목적별 맞춤형 교육과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학습자 수요에 맞는 목적별 교육과정과 교재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와 목적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원 예정 * 개발 완료: 결혼이민('19), 계절 근로('23), 한국문화('24) 비즈니스('24), 통번역('21~'24), 유학('25), 국제회의기획업 Mice('25) <향후 추진계획> ○ 온라인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겸용 교재 개발 추진 중('26년)
246. 기초 시스템 장애와 해외 학당의 예산 혼용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세종학당 운영 규칙과 지침, 사업비 매뉴얼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화하고, 지역별 워크숍 시 운영 교육을 통해 이해도 제고('25.7월~'25.12월) ○ 학당별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로 예산 운영 지침, 예산처리 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 개선('25.11월) <향후 추진계획> ○ 재단 온라인 서비스 내 소셜 로그인 기능 개발 및 적용(~'26.12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7.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지정 후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지정 전) 신규 지정 심사 시 기확보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서류 검증 및 서류 적격 기관 대상 현장 실사(전 기관 원칙,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비대면) 등 사전 검증 절차 내실화('25.12월) ○ (지정 후) 운영위험 단계별 수준에 따른 학당 관리를 위한 <세종학당 위험관리체계> 구축('26.2월) <향후 추진계획> ○ 학당 담당자를 통한 모니터링 및 세종학당 위험 단계별 관리(상시)
248. 요르단 등 중동·아프리카의 희망국 대상 학당 추가지정· 지원확대 검토 및 콘텐츠 진흥원과 협력해서 K-콘텐츠 활용한 교육강화방안을 마련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사업 추진('25.11월~'26.6월) ○ 세종학당 전략적 확대 필요 지역 대상 신규 지정기관을 선발하여 한국어 확산 추진('26.5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R&D과제 「외국인의 효율적인 말하기 학습을 위한 AI 활용 한국어진단 시스템 개발」 추진 협업('25~'27) ○ K-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 추진 중('26년) <향후 추진계획> ○ 세종학당 전략적 확대 필요 지역 대상 신규 운영 기관 선정 발표('26.6월)

【한국문화예술회】 9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49.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 추천, 심의위원 구성 및 지원금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제도 개편 완료 - 지원단체 및 심의위원 대상 심의제도 개선 설문조사('25.9.~10.)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5.10.31.) → 비상임위원의 심의 미참여 결정, 전담심의위원 사전 명단 공개 후 의견 청취 절차 도입, 심의위원 회피기준 개선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0. 비상임위원이 예술 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추천 구조와 제척·기피 제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제도 개편 완료 - 지원단체 및 심의위원 대상 심의제도 개선 설문조사('25.9.~10.)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5.10.31.) → 비상임위원의 심의 미참여 결정, 전담심의위원 사전 명단 공개 후 의견 청취 절차 도입, 심의위원 회피기준 개선 등
251. 전담심의제 도입으로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전담심의제 도입 관련 현장 전문가 FGI ('24.1.17.~1.19.) ○ 요청자료(회의록) 공개('25.10.27.)
252. (주)한국문화진흥 전임 대표 이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경영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사건 확인 즉시, 피해자 분리 조치 완료('25.6.30.) ○ 한국문화진흥(주) 경영진·노동조합 면담 및 자회사 관리지침 개정(윤리경영 책임 조항 명문화 등) 검토 ○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대표이사 해임 확정('25.10.21.)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윤리·성희롱 예방교육 및 정기 점검제 도입 등) 마련 등('25.12.27.)
253.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 경상운영비 전년 대비 12.1% 감축 편성
254.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통한 티켓 양도 방지 대책 의원실 보고('25.10.28., 전자우편) ○ 청년문화예술패스 부정행위 사전 예방 강화 - 고객센터를 통한 민간 플랫폼(중고거래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행위 게시글에 대한 제재(경고·삭제) 강화 - 민간 협력예매처와 협업하여 부정행위 예방 활동 상시 추진 (최종 결제 단계에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표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5.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관련 재원 확충 방안과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기금 재원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5.12.18.(목),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김승수/김재원/임오경 위원 공동주최 <향후 추진계획> ○ 재원안정화 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계속)
256. 대폭 삭감된 지역예술도약 지원 사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은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및 지출구조조정 반영 등으로 감액 편성 ('25년 48억원→'26년 10억원)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으로 중앙-지방 창작 생태계 활성화 사업(가칭) 편성 추진 예정
257. 나눔티켓 기부 공연의 활용률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홍보와 매칭 방식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국 지역주관처(17개 광역 지역문화재단)에 나눔티켓 사업 안내 및 참여 촉구('25.10.24. 공문) ○ '25.11월 이후 기부 객석에 대한 이용 홍보 문자 발송(4개 지역 16개 공연) <향후 추진계획> ○ 나눔티켓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공연장·단체 중심 홍보 (기부티켓 세금공제 혜택 안내 등) ○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한 참여활성화 추진

【예술의전당】 4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8. 예술의전당이 누적 적자와 낮은 경영평가에도 임원 보수·성과금을 지속 지급하는 이상한 운영과 책임 부재 문제점을 인식하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정감사 시 해당 내용 질의 받지 않은 사항으로 의원실과 종결 협의 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59. 공연장 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험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공연장 무대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단, 공연 환경의 고도화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무대 기술 인력 증원 및 출연단체의 예술인보험 가입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260. 예술의전당은 현재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구조·시설노후·공공성 훼손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의전당 구조·시설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노후 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26년 28.09억),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26년까지 편성하였고(3년 누적 166억), 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26년 2억)을 올해 편성하였음. ○ 기초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전당 공공성 강화를 위해 '26년 예술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음(작년 대비 12.58억 증액) <향후 추진계획> ○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연구용역 완료 후, 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국비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음.
261. 식음료사업 민간위탁 전환으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대관 편중 운영으로 기획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타 기관 대비 낮은 객석점유율까지 겹쳐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기획공연·전시를 확대하는 등 수익·운영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식음료 사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이양 정책에 따라 임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최대 10년)으로 임대 운영이 지속됨. 임대차 계약 종료 시기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다각화(직영 또는 임대, 혼합운영 등)를 검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획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으나 기초 예술 중심의 기획 증가로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고 중 예술사업 증액이 필요함. <향후 추진계획> ○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기존 임대 공간에 대한 최적의 운영방식 및 신규 공간 개발도 함께 검토하겠음. ○ 기획공연·전시 확대를 위한 예술사업 국고 증액 노력 및 수익·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예술경영지원센터】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62. 무용계 공모 및 심의 과정에서 특정 인물 중심의 화이트리스트 운영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4-'25년 무용 분야 공모 심의위원 대상 전수조사 시행('26. 2~3.) ○ '26년 위촉 심의위원 대상 심의 회피 등 모니터링 제도 마련('26.2.)
263.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성 보조금 중심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장기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보증) 사업 시행 -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시행('26.3.~) - 예술산업 보증 공모 시행('26.4.~)
264.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구조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6년 공모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형태로 개선하여 진행('26.1.~) <향후 추진계획> ○ '26년 사업 모니터링 및 참여 공연단체·시설 대상 설문조사 추진 예정('26.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65. 재외국민 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 근거 없이 배제한 조치와 창작준비금을 사후 환수한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포용적인 예술인 복지제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예술활동준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 간담회 진행(2회, '25년 하반기) ○ 국내 재외국민에 대해 사업 참여대상에 포함('26.3.)
266. 예술인신문고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법률 지원 연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인력 총원(1명) 완료 ○ 분쟁조정 절차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중(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법률 상담, 소송(소멸시효 도과 방지) 지원 등 법률 지원 연계 체계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67. 청년 예술인의 공동 창작 환경을 고려하여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를 보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 출범 및 운영('26.3.~) <향후 추진계획>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연구용역 추진(~'26.10.) 및 분야별 의견수렴(협단체, 전문가 등)('26.2~3분기)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노후화 개선 및 기능 고도화(~'26.12.)
268. 공공 미술기관 내 개인 표현 제한 등 검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정례화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예술인권리보장법 동영상 교육 상시 학습 지원 - 예술지원기관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제공 <향후 추진계획> ○ 공공 예술지원사업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술인권리 침해행위 예방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26.3분기)
269.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체부·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예술인 산재 보험 제도 개선 및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예술인 산재보험 장르별 현장 간담회 참석 및 의견 수렴('26.3.20., 3.26.)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관련(~'30년까지) <향후 추진계획> ○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등 적용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한국문학번역원】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0. AI 시대 한국문학번역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AI 시대에 적합한 번역인재 양성을 위해 'AI 기술대응 번역 교육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26.4. 입찰공고 중) - AI 번역윤리, AI 활용 번역실습 교육 매뉴얼 개발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AI 기술대응 번역 교육체계 구축’ 연구(~’26.11.) 결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27.~)
271. 영화·드라마·웹툰 등 K-콘텐츠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아카데미 수료 번역가 대상 인턴십 및 번역활동 지원 확대(’25년 216백만원→’26년 299백만원) - 글로벌 OTT기업 등 민간 협업 강화, 영화·드라마·웹툰·뮤지컬 등 지원 장르 확대 <향후 추진계획> ○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해 한국문학 및 K-콘텐츠를 아우르는 전문 번역인재 육성(’27.9. 개교 추진)
272. 고전·대표 문학 작품은 탈락시키고 친북성향 등 부적절한 작품을 번역대상으로 선정하는 구조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시장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전·대표 문학 작품의 경우, 기관이 주도하는 기획 번역출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 * ’25년 72백만원, 8건 →’26년 383백만원, 30건 내외 <향후 추진계획> ○ 번역·출판 지원사업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전 고지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언론중재위원회】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3. 중국 혐오와 차별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혐오·차별 조장 우려 언론보도 대상 시정권고 강화 및 언론인 등 대상 시정권고 교육 실시 - ’25년 시정권고 항목 중 차별금지 최다(1,049건 중 240건 (22.9%)), 언론인 등 대상 교육 4회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차별금지 등 사회적 법익 보호 강화를 위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및 언론인 등 대상 교육교재로 활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4.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훼손 및 악용을 방지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중재위원 대상 연수 개최('25.10.31.~11.1.) -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처리 방안, 조정기법 논의 등 <향후 추진계획> ○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전반 점검, 사건 당사자 대상 이용만족도 조사·반영
275.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인한 피해사례 관련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 -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25.6.1.~10.31.),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25.12.4.) <향후 추진계획> ○ 언론 피해구제 개선 방안 연구 지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6. 2026년도 예산에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반영 부족으로 생계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예술 강사 지원 및 문화 예술 교육 예산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국고예산 확대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중 - '26년 예산 국회 예결위원실 설명('25.11.13.) - 특별교부금 편성 및 향후 사업 방향 관련 논의('26.2.9./문체부·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진흥원) <향후 추진계획> ○ 학교예술강사의 활동 시수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 교부금 확보 노력 지속

【한국콘텐츠진흥원】 16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77. 해외센터장의 비위 감사보고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직제 신설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해외센터장 비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25.12.9.) 등 조치 완료 ○ 자체 수입 인건비 지출 대상 직제 신설 관련 감사 완료 및 결과 통보('26.2.24.) -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26.3.30) 및 주의 조치 <향후 추진계획> ○ 직제 관련 공정성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직제의 유지 여부 검토 중
278. 해외센터장의 비위 의혹과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지적에 따른 해외센터장 비위 의혹 특정감사를 엄정하게 추진 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25.12.9.) 등 조치 완료
279. 해외 센터장 비위, 직원의 음주사건 징계 지연 등 내부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 감사의 한계를 개선하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중 ○ 기관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해외사무소 근태 등 복무 관리 체계 개선 권고('25.12.31.) ○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관련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수령('26.2.13.) 후 인사팀에 해당 내용 통지('26.2.20.) - 인사위원회 개최('26.3.30.) 및 정직 조치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의 물리적 한계 개선을 위해 현지 방문 감사 활동 강화 ○ 음주 및 비위 사건 인지한 즉시 신속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예정 ○ 내부 감사 한계 개선을 위한 외부 벤치마킹 등 추진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감사 업무 실무협의회 통한 감사 기법 및 내부통제 방식 등
280. 게임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여 수출 다변화·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중국 판호 발급 문제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 '24년 조세지원 연구과제를 진행하여 제작비, 세수 증가 효과 확인했으며, 해당 제도 입법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력해서 적극 지원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6년 사업계획 반영 - 수출액 증가를 위해 게임 해외 마켓 참가 확대 * '25년 3개 → '26년 5개('26.7월~11월) -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현지 이용자 평가* 신규 추진 : '26년 30개 게임('26.9월~11월) * 해외 이용자 평가를 반영한 현지화 버전으로 게임 수출 지원 ○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26.3월) <향후 추진계획> ○ 주무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 작성 지원(~'26.4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
281.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업체가 재선정되지 않도록 사전 배제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업체 대상 지원사업 관리·운영 실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 통보('25.11.27.) -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25.12.29.) 및 수사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주무부처 논의 후 개선 방안 수립 및 이행 예정 - 문체부의 배제 조치가 사전 조치 되지 않을 시, 기관 단독 조치의 근거 불명확 ○ 감사 결과 등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조치 사례 전파 - 향후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른 사례도 추가 전파 예정
282. 자체 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인건비 지출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점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자체 수입 사업비로 부문장 인건비 지출 중인 점 인정 ○ 자체 수입 인건비 지출 대상 직제 신설 관련 감사 완료 및 결과 통보('26.2.24.) -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26.3.30.) 및 주의 조치 <향후 추진계획> ○ 자체 수입 감소에 따라 국고 보전 및 수지 차 기관 해제를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 예정 ○ 해당 직제의 유지 여부 검토 등 재정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83. 뉴콘텐츠센터 이전 과정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이전지 계약 등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뉴콘텐츠 센터 시설관리 업체의 사적 유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위탁용역사의 시설 사적 유용 등 문제점 파악 및 법률 검토, 사실관계 확인('25.3월) ○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운영관리 체계 및 세부 계획 수립·시행('25.6.13.) ○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 감사 실시 요청 공문 발송('25.9.3.) ○ 내부 감사 요청 공문 발송('25.9.11.) ○ 특정감사 실시 계획안 수립 및 관련 부서 실시 통보('25.10.15.) - 실지 감사 진행('25.11.17.~11.28.) - 감사 계획 변경으로 추가 실시('26.2.2.~2.13.) - 감사 결과 보고서 완료('26.4.10.)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
284. 단년도 보조금 중심의 공모 사업의 다년도 사업 등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 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기관의 출연금 전환 추진 중 ○ 출연금 전환 문체부, 기재부 협의('25.12월) ○ 예산안 편성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 신설 및 보완 등 검토('26.1월) <향후 추진계획> ○ 주무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겠음
285. 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한 성과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026년 5개년 제작지원 성과관리 조사 진행 및 미방영작 해외 스크리닝 행사 개최 등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후속관리 및 성과관리 강화 ○ 국내외 방송 판로 개척을 위해 마케팅 지원, OTT 플랫폼 연계 등 미방영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중 <향후 추진계획> ○ 게임 완성에서 출시까지 최대 5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5년 이후까지 출시율 조사결과 91%까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검증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5개년 지원과제의 상용화 여부 및 후속성과 등 지속 조사 추진 ○ 해외 주요 영화제의 제작지원 미방영 과제 대상 특별 상영회 및 유통상담회 운영 ○ 국내외 방송 판로 개척을 위한 플랫폼 연계 및 수출지원 강화 ○ 우수게임 발굴, 모바일 게임 제작지원 다년도 전환 등 출시율 확대 노력 예정 - 현재 PC, 콘솔게임은 다년도 지원 중이며 '26년 모바일 게임 다년도 추진
286. 글로벌 협업을 병행하여 국내 IP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글로벌 플랫폼 연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위한 글로벌 플랫폼 추가 발굴('25.9~12월) - [기존] Viu(홍콩), BBC Studios(영국) - [추가발굴] 라쿠텐 비키(미국), 드라마박스(싱가포르) ○ 라쿠텐 비키, 드라마박스 협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6.1월) <향후 추진계획> ○ Viu, 라쿠텐 비키, 드라마박스 연계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26.3월) - '25년 2개 플랫폼 → '26년 3개 플랫폼으로 연계 규모 확대
287. R&D 사업평가 부진과 게임 인재원의 높은 중도탈락률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R&D) R&D성과를 전주기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전담부서인 연구개발성과팀을 신설하여 기획 → 점검 → 사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개선 ○ (게임인재원) 게임인재원 교육생 높은 자퇴율 개선 - 개선 조치: 조기졸업 제도개선(조기 취업 요건 1년 → 6개월), 취업 교육비 지원(장학금 유치 총 28.5백만원, 57명), 교통편의 지원(셔틀버스), 기타 교육 안정성 강화(심리 진단 및 상담) 등 - 개선 결과(자퇴율 변화) 6기 33%(31명) → 7기 9%(8명) <향후 추진계획> ○ 게임인재원 8기 신규교육생 교육 개시('26.4월)
288. 해외 비즈니스 센터의 추가 확대를 중단하고 내실화 방안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추가 신규 센터 개소 없이 30개소 이내로 운영 중이며 센터별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조치함 ○ 해외진출 지원 중기 전략 수립 및 보고 완료('25.12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89. 축소·폐지 위기인 뉴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수도권 잔류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를 통해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 협의 등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방안 모색 중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와 협의해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겠음 ○ <콘텐츠 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콘텐츠 스타트업 종합 지원 세부 실행전략 마련' 연구 추진 예정(~'26.5월)
290. 대중문화예술상 용역 심사 과정에서 경력 검증과 허위 기재 시 제재를 명시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평가위원 제척·회피 서약서 보완 및 법적제재 명시한 심사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26.3월) ○ 개정 평가위원 제척·회피 서약서 평가시스템 반영 및 심사평가 매뉴얼 고도화 예정('26.4월)
291. 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임금 지급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체불시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026년 보조사업 선정업체 대상 임금체불 예방 대책 수립 중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전 임금체불 전수조사 및 임금체불 예방교육 시행 예정('26.5월) ○ 주무부처와 상습임금체불사업자 대상 법적 제재 근거 마련 협의 예정
292. 다년제 게임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펀드 내 게임 계정을 신설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PC, 콘솔에 대해 다년도 게임 개발 지원 중 ○ 지적에 따라, '26년 사업 내 모바일 분야 다년도 지원 신설을 통한 다년제 게임 개발 지원 확대 반영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주무부처의 정책펀드 게임 계정 신규 결성 시, 콘진원 적극 지원 예정 - 펀드의 경우 문체부의 소관 업무로, 콘진원에서 게임 계정 신설 여부 결정 불가

【영화진흥위원회】 1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9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독립영화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 및 소위원회의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특정 영화의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업무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왜곡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다만, 개별 작품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정 제도와 소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정해진 규정과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94.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의 취지가 검열로 오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안내 문구 재정비 추진 예정(∼'26년 상반기) <향후 추진계획> ○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 안내 문구 수정 및 홈페이지 공지(∼'26년 상반기)
295. 독립영화 취지와 맞지 않게 편향적인 심사로 인해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는바, 균형 잡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독립·예술영화 인정 업무 개선(안) 마련 및 관련 소위원회 의견 수렴 완료('25.12월∼'26.1월) <향후 추진계획> ○ 독립·예술영화 인정 업무 및 인정 필증 발급 관련 시스템(홈페이지 연계) 개선 추진(∼'26년)
296. 독립영화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인디그라운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시 고도화를 지원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독립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예산 확충 방안 검토(∼'26년)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7년도 정부안에 예산 증액 반영 추진('26.8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297. 삭감된 지역·독립영화 예산을 복원하고, 여성·다양성 영화 가산점 제도는 유지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26년 정부안 독립영화 관련 예산 165억원에서 205억원으로 24% 확대 ○ 지역영화 예산 회복 위한 지역영화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25.12.8.) ○ 「영화진흥사업 성평등 및 다양성 지원정책 평가 연구」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3월) <향후 추진계획> ○ 지역영화 네트워크 간담회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역영화 실태조사 진행 예정(~'26년 상반기) ○ 문체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7년도 정부안에 예산 증액 반영 추진('26.8월) ○ 성평등 및 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영화인으로 구성된 성평등소위원회에서 가산점 제도에 대해 논의 예정
298.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사업의 예산을 복원하고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27년도 정부안 반영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 중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7년도 정부안에 예산 증액 반영 추진('26.8월) ○ 중고등 국어교과서 수록 영화에 관한 특강 진행으로 공교육과의 연계 강화('26.4~12월)
299. 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 모델로의 복원을 검토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이관을 거부한 기존 피해자 관련 든든 자체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소요 등 자료 협조 요청('25.9월) - 관련 자료 검토하여 미인계 피해자에 대한 별도 지원 완료('26.2월) - 유관 부처 및 여성영화인모임과 협의하여 개선방안 준비 중 <향후 추진계획> ○ 주무부처 및 재정당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개선 방안 협의 예정
300. 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1년 단위 입찰 운영을 개선하고 입찰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유관 부처 및 여성영화인모임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준비하였으며, 관계부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구체적 개선 방안 협의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구체적 개선 방안 협의 예정
301. 영화의 구조적 경쟁력 증진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할인 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완료 ○ '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 분석 용역 완료('26.3월)
302. 홀드백 제도 도입, 극장 관람 활성화, 민간자금 투자 기구 도입, 불법 촬영 대안, 정책제 구독형 관람권 등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화산업의 핵심 정책을 적극 실행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홀드백 제도 검토를 위한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4월)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업무협약 체결('25.12월) 후 저작권 보호 사업 정보 공유 등 불법유통 피해 대응을 위해 협력 중 -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개최('26. 3월) 및 불법유통대응협의체 개최('26.3월) 등 위원회 자체 협의체 및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 실무협의체에 상호 참가 중 ○ 민간자금 투자 기구 관련, 소피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완료('25.12월) 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 연구 내용 소개 및 관련 논의 실시('26.1월) <향후 추진계획> ○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26년 4월) 결과에 따라 영화산업 내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계획안 마련 예정
303. 한국영화 제작 증가를 위하여 중예산 영화 지원을 확대하고 홀드백 제도를 실행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완료 ○ '26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 예산('25년 100억 원→'26년 200억 원) 2배 확대 ○ '26년 추경을 통해 중예산 제작 예산 확대(추가 260억 원) ○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4월) <향후 추진계획> ○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 약정 체결('26.4월 예정) 및 보조금 지급 ○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26.4월) 결과에 따라 영화산업 내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계획안 마련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04. 시나리오 공모전의 다양성 가산점 제도개선의 역행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해 순위가 뒤바뀌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문체부 권고에 따라 가산점제도 관련 사업 방식 개선 후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성 항목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였음. 개별 사업별로 달성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대안 발굴을 통해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음 ○ 「영화진흥사업 성평등 및 다양성 지원정책 평가 연구」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3월) <향후 추진계획> ○ 한국영화성평등 소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 제언 타당성 검토 및 해당 문제 논의 후 개선 방안 모색 예정
305. 영화 제작 과정에서 표준 크레딧 기준 등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 관련 분쟁만을 담당하는 중재 위원회 신설('25.3월) - 크레딧 등 저작권 관련 분쟁 '25년 접수 11건 중 6건 처리 완료('26.4월 기준) ○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관련 「한국영화 시나리오 성명 표시권(크레딧) 가이드라인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4월) <향후 추진계획> ○ 전주국제영화제 등 주요영화제에서 크레딧 연구 관련 포럼 개최하여 영화업계 의견수렴 예정('26.5월)
306. 블랙리스트 특위의 피해 인정 의결 요청에도 안건 상정 부결로 피해자 구제가 지연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문체부 백서에서 피해가 입증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위의 연구보고서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기에는 포괄적이고 진상조사위 백서의 피해유형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직접 관여한 게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시국선언자, 블랙리스트 등재자 등) 등이 포함되어 안건 상정이 부결됨으로 해당 안건은 폐기됨 - 이후 피해자 중 13명이 대한민국, 영진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변론진행)으로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재발방지교육 등 지속 추진(~계속) <향후 추진계획> ○ 매년 블랙리스트 예방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지속 노력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07. 영화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화 제작 현장의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완료 ○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 내 탄력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탄력근무는 운송업, 보건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영화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향후 추진계획> ○ 근로기준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고 영화 노·사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며 필요 시 관련 내용 검토 예정
308. 통신사 할인등에 따른 영화 티켓 수익배분 왜곡구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영화티켓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26.1월) 참석 및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서 개선방안 논의('26.2월) <향후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조사 동향 및 부금 정산 투명성 관련 업계 협의 내용 지속 모니터링
309. 글로벌 협업과 제작방식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바,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국제공동기획개발, 국제공동제작, 로케이션인센티브 사업 등 다양한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확대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적극 추진 - '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신규 예산 30억 원 확보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6년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 신규 예산 30억원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310. 영화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홀드백' 원칙을 제도화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 연구 추진 및 발표 완료('26.4월) <향후 추진계획> ○ 연구결과에 따라 영화산업 내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계획안 마련 예정

【영상물등급위원회】 7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11. 제주4·3 등 역사적 사실 왜곡 콘텐츠의 등급판정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등급분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등급 분류 위원 간담회(2회) 개최('25.11.17./11.19.) -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2단계 검토 과정(영화전문, 소위원회) 운영
312. 수사 진행 중인 심사위원회에 대해 직무배제 기준을 확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된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25.12.8.) <향후 추진계획>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내규 개정·시행(2026년 상반기)
313. 국내 OTT처럼 운영하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영화비디오물 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5.11월) -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
314. OTT 자체등급분류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심사가 불일치할 경우 조정 기간 동안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한계를 보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자체등급분류책임자 의무교육 시, 사후조치 신속 대응 안내를 완료('25.11.13.)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등급 상향 의견에 대해 사업자 즉시 수용 <향후 추진계획> ○ 사후조치 관련 긴급 의결안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원격 의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26.上)
315. 영화 상영 시 TV 송출 광고가 재심의를 받는 이중규제 문제를 보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광고영화 등급분류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26.1.23.) ○ 광고영화 이중규제 개선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6.2월) -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16. 사전등급분류제를 적용받는 영화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한 OTT 사업자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향후 추진계획> 조치 중 ○ 매체별 등급분류 제도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실시(~'26.11월)
317.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 신청 수수료 부과 또는 분담금 제도 도입 등 비용 부담 구조 개선방안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조치 중 ○ 업계 의견 수렴 및 제도보완 방안 검토('26.上)

【한국영상자료원】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18. K-콘텐츠 상징물과 원본 필름을 보관할 수장고 확충을 추진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국회 및 문체부 협의를 통한 보존고 확충 기본설계 연구용역 '26년 예산 확보(2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파주보존센터 필름수장고 확충 및 박물관 보존공간 확보 기본설계 연구용역 실시('26년) ○ 보존고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319. 공공 아카이브에 OTT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영화심의작 외 보존가치가 높은 영상자료에 대한 수집 협조의무를 담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협조 (의안번호 2214018)('25.12월) <향후 추진계획> ○ OTT 콘텐츠의 공공 아카이빙 제도화를 위한 국회 및 문체부 협의 지속('26년) ○ 개별 OTT 콘텐츠 제작사/플랫폼 협의를 통한 OTT 콘텐츠 수집 및 제도화를 위한 의견수렴 지속('2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20. 해외게임사에 집중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해외사업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위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지속 수행(시정 이행률 99.4%) - 미시정 게임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 협조를 통해 국내 유통제한 절차 수행 ○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법 시행 초기, 대상 사업자 지정 의무 이행 관리 강화 - 지정 대상 검토·확정, 업무 수행 절차 확립(~'25.9월) - 대리인 지정 안내, 지정 확인·검토('25.10월~) * 대상 사업자 95개사 중, 93개사 지정 의무 이행 확인('26. 3. 기준)
321. 중소·인디 게임의 등급심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업계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위원회 부산청사 소재 지역에 대한 게임물 출장검토 수수료를 감면 조치함('26.1월 등급분류규정 개정 시행) - 개정 전: 출장검토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에 <u>부산/울산/경남지역</u> 50만원, ~ (중략) 가산함 - 개정 후: 출장검토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에 <u>울산·경남 지역</u> 50만원, ~ (중략) 가산함 ○ 중소기업 및 개인개발자 등급분류 검토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30%→50%) 시행('23.10월~) 중
322. 숙박업소를 가장한 '게임텔'의 PC방 운영에 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관계기관,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조를 통해 대응 및 점검 강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 ○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온라인 광고 억제 및 숙박업소 내 PC제공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 행정지도 추진 예정('26.2분기 예정) - 안내 활동 및 행정지도 이후에도 명확한 위반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경찰-지자체-게임위 특별 합동 단속 추진 예정
323.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중독과 혐오 표현 확산 문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5년 등급분류 업무 위탁기관 검토 역량 보수교육 완료(분기별 1회) - 민간이양 게임물 등급 검토 관련 심층교육 실시('25.10월) ○ 교육포털 및 찾아가는 건전 게임이용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위원회 교육포털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교육 콘텐츠 2종을 게시(이용자 상시학습)하여 관련 정보 지속 안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건전 게임이용교육(초중고 학생 대상)을 통해 게임 내 혐오표현 등 역기능 요소 예방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중
324.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체계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민간 등급분류기관 대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지원 교육 실시('25.10월) ○ 게임물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민간위탁 1단계(PC, 콘솔 플랫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시행('25.10월 ~)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 위탁계약 체결('25.10월) -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위탁 완료('25.11월)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민간위탁 완료('26.1월) * 게임물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민간위탁 2단계(모바일) 시행 예정('26.4분기)

【한국저작권위원회】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25. 저작권 사용료·수수료 심의 기관과 피심의 이익단체 간 인적·금전적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교육 완료('25.12월) ○ 특정업무 참여자 이해충돌 관리지침 등 제·개정('26.3월)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26.3월)
326.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의견 수렴 적극 진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워킹그룹을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 및 창작자 등 AI-저작권 관련 정책수요자 대상 의견수렴** 진행 *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분과, 2분과, 전체 회의('25년, 총 11회) ** 공정이용 관련 온라인 설문('25.10.13.~11.2.), AI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25.12.4.) 개최 및 온라인 의견 수렴('25.12.4.~12.10.) <향후 추진계획> ○ AI-저작권 관련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지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27. 토렌트 특성을 악용한 고소 남발 등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토렌트 관련 주요 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다중 플랫폼 게시·송출('25.10월~11월) ○ 저작권 e-배움터내 신규 교육과정 개설·운영('25.11월~) <향후 추진계획> ○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최신 침해 사례를 반영하고, 저작권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26년~)

【한국저작권보호원】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28. K-콘텐츠의 텔레그램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하고 접속차단 및 본사 협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텔레그램 채팅방 내 권리자의 보호요청 저작물 모니터링 → 해외 현지어 기반(외국어 자막) 한국 영상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16건) 및 신고 → 텔레그램 대상 경고장 발송 및 텔레그램 내 저작권 침해 신고 조치('25.10.23.)
329. 해외 불법 저작물의 낮은 삭제율 개선을 위해 선제적 접속차단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삭제율 제고 위해 3차에 걸친 경고장 발송*, 삭제 비협조 해외사이트 연락처 확보 방식 다각화** * (1차) 저작권보호원 명의 → (2차) 위탁사 내 변호사 → (3차) 해외 현지 법무법인 명의 ** CDN 서비스 제공업체(클라우드플레어 등)에 신고 → CDN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해당 사이트에 신고 사실 공지 → 해당 사이트가 보호원 등에 연락 → 소통 창구 확보 → 콘텐츠 삭제 가능성 제고
330. 불법 웹툰 사이트와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에 대응하여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불법 웹툰 사이트 및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내 AI를 기반으로 일부 모니터링 분야에 대하여 자동 탐지 및 이미지 특징점 비교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통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중

【한국언론진흥재단】 16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31. 공익광고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 중소 언론사 지원이 목적임에도 대형 언론사에 배정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배분 기준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익광고는 지역·중소매체에 한하여 집행,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26년 사업예산 확대 - 사업 대상: ▲지역신문 및 잡지 ▲지역MBC, 지역민방, 중소지상파 및 종교방송 ▲인터넷신문 - 집행 금액: 전년도 정부광고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 산정 ○ 공익광고 추경 사업('25.11~12월)은 매체별 정액(균등) 방식으로 집행하여 영세 매체 실질적 지원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지역·중소매체에 대한 지원 실효성 확대를 위한 공익광고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정비 지속
332. 정부광고 심사위원 명단 관리의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내부 검증 체계를 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의원실 제보 명단과 실제 심사위원 풀(Pool) 대조 결과, 일치하는 명단 없음(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외부 유관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명단 접수, 심사위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33. 정부광고 심사위원 명단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심사위원 풀 운영을 점검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심사위원 명단 유출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심사위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사위원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모니터링 강화
334. 정부광고 심사위원 원본 명단을 제출하고 광고 전문성과 무관한 심사위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의원실 제보 명단과 실제 심사위원 풀(Pool) 대조 결과, 일치하는 명단 없음(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외부 유관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명단 접수, 심사위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35. 가짜뉴스를 확산한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매체의 신뢰성과 관련한 정보 제공절차 개선('26.1.31.) - 매체정보(언론중재 및 자율심의 결과 등)를 광고주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정부광고주 대상 매체정보 상시 조회 기능 지속 안내 및 제공 정보 확대 노력
336. 언론진흥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가짜뉴스 매체에 정부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0.) 시, 현장답변 및 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신문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 등에 의거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매체의 신뢰성과 관련한 정보 제공절차 개선('26.1.31.) - 매체정보(언론중재 및 자율심의 결과 등)를 광고주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정부광고주 대상 매체정보 상시 조회 기능 지속 안내 및 제공 정보 확대 노력
337. 언론진흥재단 열독률 조작 의혹의 무혐의 종결에도 이사장 해임건의로 조직 내 분열을 야기한 유병철 이사, 남정호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7.) 시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이사 해임건의안 상정 검토 결과 보고 ○ 해당 임원 임기 만료로 퇴임('26.4.9.) <향후 추진계획> ○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조직 안정화 및 갈등 재발 방지 추진
338. 정부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지역방송사 지원금 규모의 산출 근거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0.) 시 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 산출 근거에 대해 의원실 방문 설명 및 서면 제출('26.1.23.)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협력을 통한 지원금 확충 및 사업 지속 노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39.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언론 길들이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부광고 홍보매체는 정부광고주가 결정하며(「정부광고법」 제6조제1항), 재단은 정부광고주의 매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 자료 제공(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정부광고 집행내역 월별 공개로 투명성 제고('26.1.31.) ○ 매체의 신뢰성과 관련한 정보 제공절차 개선('26.1.31.) - 매체정보(언론중재 및 자율심의 결과 등)를 광고주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정부광고주 대상 매체정보 상시 조회 기능 지속 안내 및 제공 정보 확대 노력
340. 특정 단체 행사에만 프레스 센터 및 지원금을 허용하지 않도록 프레스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프레스 센터에서 극우 정치적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책임자를 징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재단 사규 개정 및 대관·지원 기준 재정비 - (대관 기준 정비)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행사 우선 대관 원칙 명시 - (대관 제한 사유 명시) 대관 제한 및 취소 사유로 특정 집단의 입장, 특정 관점에만 집중된 정치적 행사 명시 ○ 해당 임원 임기 만료로 퇴임('26.4.9.) <향후 추진계획> ○ 프레스센터 대관·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전 안내를 통한 운영 관리 강화
341. 프레스센터 대관, 단체지원 사업 등 주요 사안에서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재단 사규 개정을 통해 결정권한 상향 - 대관 신청 반려 및 기 승인 행사의 취소 등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 상향 조치 완료 ○ 단체지원사업 중립성 강화에 대해 의원실 방문 설명('26.1.23.) - 외부 심사위원 비중 확대, 대면 심사 전환 등 ○ 심사 외부위원 확대(3인→4인) 및 내부위원 축소(2인→1인), 대면 심사 전환, 2026년 단체지원 심사 시 적용('26.3.23.)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사안 결재 책임 체계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42.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증액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25년 67개 → '26년 74개로 확대,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25년 83억원 → '26년 118억원으로 35억원(42%) 증액 <향후 추진계획> ○ 지역신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방식 개선 검토(지역신문사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차등 지원 등)
343. 정부광고 수수료의 적정 비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정부광고 수수료 비율의 적정성 검토 완료 - 민간(15%) 대비 낮은 수수료율(10%) 체계를 유지 중이며, 수익금의 법정 용도 사용 및 잔액 전액 기금 출연 등 공적 재원으로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 ○ 지역언론 대상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지역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된 총 118억 원 지원 - (지역·중소방송) 재단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112.5억 원 증액된 총 148억 원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언론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연구 지속
344. 정보 접근권을 위한 신문 공동수송 사업 예산 축소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0.) 시, 현장답변 및 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26년 신문 공동수송 노선 운영 사업비 당초 12.71억 원에서 2.62억 원 증액된 15.33억 원(전년동)으로 국회 예산 의결 ○ 국회의 예산 증액분에 대한 과업내용 추가 및 계약변경 완료('26.1월) <향후 추진계획> ○ 총 15억 원 규모의 신문공동수송사업 안정적 수행
345. 프레스센터 미화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처우 악화 문제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7.) 시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기존 임금 보장 및 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과 3년 장기계약을 통한 고용개선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계약 이행 실태 상시 점검 ○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46. 재단은 정부광고 집행 시 가짜 뉴스 확산 매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매체에 대한 검증 참고자료를 정부 기관에 적극 제공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감수감('25.10.20.) 시 현장질의답변서 제출 완료 ○ 매체의 신뢰성과 관련한 정보 제공절차 개선('26.1.31.) - 매체정보(언론중재위 중재결과, 자율심의 심의결과 등)를 광고주가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정부광고주 대상 매체정보 상시 조회 기능 지속 안내 및 제공 정보 확대 노력

【국제방송교류재단】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47. 삭감된 위성사업비 예산의 복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의존도를 낮출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삭감된 위성사업비 예산 증액 및 방통기금 예산의 일반 회계로 전액 이관 완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48. 전자책 구매 시 약관에 소유권에 대한 안내를 명시하고 가격을 합리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서비스 이용제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자책 구매자에게 소유권 및 이용권 개념 안내 및 다운로드 방식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플랫폼 또는 약관을 통해 안내할 것을 권고(4개사) <향후 추진계획> ○ 전자책 소유권 및 이용권 관련 안내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전자책 가격 현황 등 파악, 합리적 가격환경 조성 유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49. 해외 사례 반영하여 인구소멸 지역의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공공 지원 방식 및 지역 연계 모델 등에 대한 서점 및 유관기관 인터뷰 실시('26.3월) <향후 추진계획> ○ '26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행안부) 소재 서점 가산점 부여 방안 추진('26.6월) 하고, 서점문화 프로그램 지원 시에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지역서점의 문화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대한체육회】 4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50. 국가대표 선수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신속히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시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수강 후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25.10.16.) ○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독려 조치를 시행 중 - ('025.9.26.) 46개 종목 1,609명 중 640명(39.78%) → (지침개정 후) 필수 구비서류로 지정하여 100% 이수
351.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IOC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대한체육회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유치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IOC 미래올림픽유치팀, 정부 및 전북과 지속 협의를 통해 전주하계올림픽 개최계획서 내실화 및 국내·외 절차 관련 업무 지원(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 등)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지속 협의 추진 등 문체부 정부심의 연계 지속 업무협조
352. 전북도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와 협의를 강화하고 분산 개최 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회 유치 관련 IOC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를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계획서 내실화 도모 <향후 추진계획> ○ 개최계획서 실현가능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IOC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53. 사격 실탄 유출과 관련해 사격 연맹의 보고와 통제가 미흡하며 사무처장의 근무 기강해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실탄 유출 관련]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특정감사 실시('25.10.14. ~ 11.13. / 30일간) 및 결과 통보('25.12.24.)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중('25.12.24. ~)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안전관리 매뉴얼화 및 보안 강화 - 사격장 및 무기고 운영·안전관리 프로세스 매뉴얼 수립 완료('26.2.26.) - 무기·탄약고 보안 시설(CCTV) 확충 완료('26.1.14.) <향후 추진계획> ○ 실탄총기 관리 포함 사격장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운영시스템 개선 ○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관리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운영 및 보안 개선 - 사격장 주변 외곽 펜스(울타리) 설치를 통한 출입 통제 강화 [사무처장 관련] <조치사항> 조치 중 ○ 문체부 합동 대한사격연맹 특정감사('25.10.14~11.20.) ○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25.12.24.~) ○ 대한사격연맹 경기용 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6.4월~상시) <향후 추진계획> ○ 인사기금마케팅위원회(연맹) 개최 예정('26. 4월 중) ○ 회원종목단체 직무교육 콘텐츠 내, 공직유관단체 사무처 인사복무 관련 내용 편성·운영(연중)
354. 복싱대회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 및 관리 책임 재점검을 통해 징계와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안전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과 더불어 제보자 보호 및 피해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25.11.26.) 및 모든 종목단체 정관에 대회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내 ○ 종목단체별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안내 및 종목별 안전관리 매뉴얼 자체 제작 컨설팅 및 매뉴얼 실무활용 교육 실시('25.12.18.) ○ ('25.12.15.) 추가 조사 완료(▲WB공인장비 사용 확인, ▲협회 측 제보자 색출·협박 의혹 전면 부인,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경위 확인 및 재발방지 수립 확인 등) → 현재 진행 중인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예정 ○ ('26.1.15.) 대한복싱협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 등록된 지도자만 세컨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화 ○ ('26.1.15.) 대한복싱협회 경기규칙 개정 - 국내대회 운영에 적합하도록 세부 규정(의료자원 배치 기준 등)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정부명칭대회 평가지표 실효성 제고 - 현행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현장 실행력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세부지표 보완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의료체계 미확보, 지적사항 미시정 등을 명시적 감점 사유로 구체화 ○ 현장점검 확대(리스크 기반 집중점검) - 고위험 종목 및 전년도 사고 발생 등 관리 필요 종목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점검 - 제출된 안전계획서 기반 이행 여부 중심 점검 및 미비 사항 즉시 시정조치 및 결과 제출 요청
355. 취임 직후 회장·총장실의 집기를 과도하게 교체한 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교체된 가구들의 내용 연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과도하게 교체된 가구가 있는지 확인하였음 ○ 회장실 운동기구는 직원 휴게실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임원실 집기류 교체 시에는 내용 연수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에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임
356. 지난해 국정감사와 동일하게 대한체육회의 인건비 및 통계 자료 등 자료제출이 제출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을 지적하고, 인건비, 예산 측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맞지 않고 있으며,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와 청렴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되고 심지어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들조차도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2025년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 직원 미지급되었음 ○ [경영평가 성과급 시행세칙 제6조] 평가 대상 기간 중 임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자료 제출 시 과거 통계자료와의 일관성 여부를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중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성과급을 직원연봉규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 관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57.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종목단체 회계법인 일감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법인만 바뀌어도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바, 제도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7년 사업계획안 주무부처 협의 예정(~'26) * '23~'25년 회계연도 계약 체결 및 이행 중('26년 말 종료 예정) <향후 추진계획> ○ 회원종목단체 의견수렴 및 회계감사에산의 수행단체별 재교부 우선 검토 예정(~'26 하반기) * (대안) 사업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연 단위 공개입찰을 통한 회계감사 추진도 대안으로 검토 가능
358.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체부, 대한탁구협회(대한체육회 경유)로 인센티브 부당 지급 환수 권고('25. 11. 3.) ○ 대한탁구협회, 총 281,930,950원 규모로 11명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환수 요청('26. 1월, 각 개별 통보) * '26년 3월 기준, 2명, 19,260,000원 환수 조치 <향후 추진계획> ○ 대한탁구협회의 인센티브 환수 상황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음
359.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 회장으로 재임 당시 발생한 후원금 및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의 유용·부적정 지출과 해외 출장비 정산 미흡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구조적 운영 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회원단체의 사회적 물의 또는 징계 사안 발생 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관리제도 마련('25. 11월) ○ 체육인 인권보호, 체육단체 비위사건 대응 및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렴윤리팀 신설('25.11월) <향후 추진계획> ○ 회원종목단체 직무교육 시, 보조금 집행 관련 및, 공직 유관단체 보조금 위반사항 관련 내용 편성·운영 ○ 각종 비위행위 발생 단체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청렴·모범단체에는 정부 혁신평가와 연계한 재정 등 지원 확대로 공정하고 엄격한 종목단체 관리 강화
360.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특별 감사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서울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등 특정감사 실시('26.1.19. ~ 26., 대한체육회 2명, 서울체육회 2명) ○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26.3.6.) ○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담당자 문책 및 스포츠 공정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 검토 등 이행 중 <향후 추진계획> ○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관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61.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회원단체 및 체육계 전반의 사고·비위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팀 신설 기반 마련('25.11월) ○ 체육계 비위사건의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청렴윤리조사관 운영 등에 대한 내규」 등 제도 개선 추진 중(~'26. 5월 중) - 초기 대응체계 구축 시 “스포츠윤리센터” 관할 사안(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은 신고 접수·조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내규 제정을 위한 자문 중 <향후 추진계획> ○ 「청렴윤리조사관 운영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및 시행 안내(~'26. 5월) ○ 청렴윤리조사관 구성·위촉 및 운영 (~'26. 5월)
362. 종목단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금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체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목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내부시스템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통해 종목단체 지원 규모 상시 파악 완료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로 차등 지원 방안 모색
36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소한 로잔사무소가 폐쇄되었는바, 국제 스포츠외교 기반을 재정비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기존 국내 국제인재 장기 파견 외 단기 파견제도 신설 및 파견 실시(하키/1명) ○ 국제연맹-국내연맹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 발굴 도모 <향후 추진계획> ○ 문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스포츠기구 인재 파견 확대 방안 검토 ○ 중장기적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스포츠 이벤트(회의, 대회) 유치 등 문체부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 발굴
364.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 보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하한선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5년 예산안, '26년 추경안 등 지속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무국장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안을 제출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향후 추진계획> ○ 관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27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65.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계획의 지연으로 지자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요구에 맞춘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유네스코가 요청한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한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체부와 대체부지 및 공모 시기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대체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방향 및 시행기관 확정, 예산 수립 등 문체부와 협의
366. 코치의 미성년 선수에 대한 성폭력·폭행 가해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징계체계를 확립하고 미흡한 사후조치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구광역시빙상연맹의 2024. 12. 자체 진정 건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의 원칙)에 따라 1심(대구광역시빙상연맹), 2심(대구광역시체육회) 징계 절차로 진행됨 ○ ('25.12.29.) 동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1심 기관(대구광역시빙상연맹)은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5.12.9.)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함 <향후 추진계획> ○ 검찰 수사 및 판결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후속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대구광역시체육회와 협조하여 확인하고, 미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임
367. 폭력·성비위 지도자를 배제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를 확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폭력·성비위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에 의해 엄격하게 지도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바,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에 협조하겠음
368.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부정한 회계사용과 빙상연맹의 국회 허위 자료 제출 등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치 중 ○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예비조사 '26.3.30.~4.3./실지감사 '26.4.6.~4.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69. 빙상연맹의 징계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대한체육회가 즉각적으로 관여하여 외부 감사를 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치 중 ○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예비조사 '26.3.30.~4.3./실지감사 '26.4.6.~4.30.)
370. 빙상연맹의 지도자 인사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인사 밀어내기 등 부당한 조치를 개선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치 중 ○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예비조사 '26.3.30.~4.3./실지감사 '26.4.6.~4.30.)
371. 빙상연맹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을 따르지 않은 징계 조치에 대해 선수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단체 지정 등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예비조사 '26.3.30.~4.3./실지감사 '26.4.6.~4.30.) <향후 추진계획> ○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정
372. 빙상연맹 회장의 밀라노 동계 올림픽 선수단장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회의록을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선수단장 선임 안건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 의원실 제출 ○ 대한빙상경기연맹 내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빙상 종목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선수단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373. 빙상연맹 비위 특정감사 이후에도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체육회·종목단체의 징계 회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상 허점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법적 쟁송 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징계 확정이 지연된 점이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행정적 이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빙상연맹 주요 조치경과] · ('21.8.30.) 제7차 공정위에서 교육부 징계 관련 전명규 측의 소송 1심 선고 시까지 징계 검토를 유보 · ('24.8.) 연맹의 자료 요청(24.10.2.)에 전명규 측 소송 진행을 이유로 연기 재요청(24.10.4.) · ('24.11.21.) 제43차 공정위 개최(자료 요구, 징계 심의 일정 결정 등) · ('25.2.) 연맹의 자료 재요청 · ('25.10.) 전명규 측, 조속한 징계위(공정위) 개최 요청,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25.11.) 월드컵 출장 일정 등을 고려, 심의 일정 조율 의견서 제출 · ('26.1.15.) 제12차 공정위 개최, 2018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 요구사항 최종 심의 및 의결('건축' 적용하였으나 포상 감경하여 '불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74.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대회 운송비가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고,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실 대응한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운송비 관련]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 조사반 구성 - 법률위반사항 등 검토·조사(∼'26. 상반기) ○ 회원종목단체 직무교육 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 철저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조사내용 주무부처 협의(∼'26. 상반기) ○ 회원종목단체 직무교육 콘텐츠 내, 공직유관단체 보조금 위반사항 관련 내용 편성·운영(연중)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관련] <조치사항> 조치 중 ○ ('25.3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의결 (여자선수 출전정지 3개월, 남자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지도자 견책) ○ ('25.5월) 합숙훈련 지침 개정 및 배포 완료, '25년 철인3종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지원 제외 ○ ('25.7~8월) 대상자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인용에 따른 징계 심의 절차 일시 유예 ○ ('25.11월) 경찰 수사 결과 통지(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 ('26.1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결과, 1심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기각 및 원심 유지 확정 ○ ('26.3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여자선수)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향후 추진계획> ○ 그간의 체육계 공정성 제고 노력을 담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실무 지침서를 배포하여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관할 단체에서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안내 추진하고, 체육계 전반에서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75. 프로축구, 전국체전 등에서 오심이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도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심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25~) - 상임심판 처우 개선, 전문교육 및 평가 강화,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심판 보조 장비 도입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상임심판제도 지속 운영 및 개선 - 개인/단체 평가 강화, 우수 심판 인센티브 부여 및 하위 평가 심판 교체 등 환류 강화('26~) ○ 심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클린심판 아카데미 개선(계속) 및 전문역량강화 집중교육 신규 추진('27~) ○ AI, IT기술 활용 판정 보조 장비 지원 신규 추진 - 종목별 AI, ICT 기술을 접목한 판정 보조 장비 개발 현황 연구('26) -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심판 보조 장비 도입 지원 신규 추진('27~)
376. K리그에서 현재 심판 배정에 학연·지연 등 카르텔이 형성 되었으므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축구협회 심판 혁신(안) 발표('26.2.23.) - 심판 배정 및 평가 개선, 심판이력시스템 구축, 심판행정 개선 등 * 1차 토론회(1.6.), 2차 토론회(1.20.), 공청회(2.4.) - 배정 권한 이양(심판위원회 ⇒ 사무국(심판팀)),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심판 등급, 경기정보 등) 기반 시스템 자동 배정(1차) 이후 사무국 확정(2차) 하는 방식으로 심판배정 시스템 도입('26~) <향후 추진계획> ○ 대한축구협회 심판 혁신 과제 추진('26~) - 심판 사무국 강화(현 심판팀 ⇒ 심판실 격상) 등 심판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심판 사무국으로 대폭 이양하여 심판행정의 견제와 균형 회복('26) - 심판 이력(교육, 배정, 평가, 체력 등) 시스템 구축('27) 및 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배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377.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VAR 활용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축구협회 심판 혁신(안) 발표('26.2.23.) - 심판 배정 및 평가 개선, 심판이력시스템 구축, 심판행정 개선 등 * 1차 토론회(1.6.), 2차 토론회(1.20.), 공청회(2.4.) <향후 추진계획> ○ 대한축구협회 심판 혁신 과제 추진('26년~) - 심판 간의 판정의 통일성 향상을 위해 라운드별 이슈 상황 온라인 피드백 교육 지속 운영 - 시즌 전 동계훈련 및 보강교육 시 VAR장비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VAR시뮬레이터 훈련 실시 - VAR 장비 및 카메라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프로연맹 협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78. 공소시효 경과 사안에 대한 재조사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영구제명된 지도자의 현장복귀도 철저히 차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안은 동 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보유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협조 및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2025년에 개정하여 징계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징계혐의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지양하고 현행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하에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0조의2(징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각 체육단체 스포츠공정 위원회의 처분 결과(제명 등)를 공유 받는 즉시 징계관리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현장 복귀를 차단하고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관리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379. 해외에서 성폭력·폭행·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로 해임된 지도자의 국내 지도자 채용 시 검증 절차를 수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내 경력 검증 및 윤리성 평가 관련 조항 신설('26. 2. 개정) <향후 추진계획> ○ 지도자 선발 검증 절차 강화: 자기 신고 의무화, 국제연맹 등을 통한 검증 절차 마련 등																				
380. 장흥교육원 건설비 지원 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정부에 운영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자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타 공공기관 교육시설 현황* 조사(~'25.6월) * 타 공공 교육시설의 경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운영, 수익률 10% 미만으로 자립형 수익구조 전무 <table><tr><th>기관명</th><td>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td><td>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td><td>농식품공무원 교육원</td><td>전라남도 인재개발원</td></tr><tr><th>위치</th><td>충북 제천시</td><td>대전 유성구, 경기 화성시</td><td>전남 나주시</td><td>전남 강진군</td></tr><tr><th>'25년 예산</th><td>(국고) 4,908백만 원 시설 3,565 / 교육 1,343</td><td>(국고) 10,593백만 원 시설 1,929 / 교육 8,664</td><td>(국고) 8,212백만 원 시설 3,825 / 교육 4,387</td><td>(지방비) 3,823백만 원 시설 642 / 교육 3,181</td></tr><tr><th>수익률</th><td>미공개</td><td>6.7%</td><td>5.1%</td><td>3.1%</td></tr></table>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위치	충북 제천시	대전 유성구,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전남 강진군	'25년 예산	(국고) 4,908백만 원 시설 3,565 / 교육 1,343	(국고) 10,593백만 원 시설 1,929 / 교육 8,664	(국고) 8,212백만 원 시설 3,825 / 교육 4,387	(지방비) 3,823백만 원 시설 642 / 교육 3,181	수익률	미공개	6.7%	5.1%	3.1%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위치	충북 제천시	대전 유성구,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전남 강진군																	
'25년 예산	(국고) 4,908백만 원 시설 3,565 / 교육 1,343	(국고) 10,593백만 원 시설 1,929 / 교육 8,664	(국고) 8,212백만 원 시설 3,825 / 교육 4,387	(지방비) 3,823백만 원 시설 642 / 교육 3,181																	
수익률	미공개	6.7%	5.1%	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 보조금 지원 필요성* 지속 역설(~'25.12월) * 개발원은 국가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공공 인프라 이므로, 완전한 자립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정부 보조금은 기존 투자에 대한 관리 비용의 성격이며, 공공 교육시설의 전면 자립 전제는 선례가 없음 * 기존 건립비 투자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원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필요
381. 경직적인 회원단체 승인제도로 인해 종목발전과 국제대회 참가 기회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임시참가제 등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회원종목단체 신규가입 및 등급요건 완화 등 제반규정 개정 검토 - 신규단체 가입요건 완화 방안, 미가입단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체육회 지원 방안 등 - 그간 미가입 단체 선수파견 관련 사례 조사 등 <향후 추진계획> ○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개정 추진(~'26.6월)
382. 부산 전국체전에서 발생한 복싱 오심 등 심판운영 미숙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경기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 자질 향상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심판 역량 강화 교육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상임심판제 지속 운영 및 개선('26~) - 개인/단체 평가 강화, 우수 심판 인센티브 부여 및 하위 평가 심판 교체 등 환류 강화 ○ 심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일반심판: 클린심판 아카데미 운영(계속) 및 전문역량강화 집중교육(3개 종목, 1개월) 신규 추진('27~) ○ AI, IT기술 활용 판정 보조 장비 지원 신규 추진('27~) - 장비운영용역, 장비구매 등 신규 예산반영 추진
383.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회신 지연 및 미이행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미처리 사안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미처리 사건에 대한 처리 촉구 공문 발송),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신율이 저조한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 이행을 독려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아울러 동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주기적 미이행 단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회신 지연 및 미이행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미처리(90일 이상) 단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11항에 따라, 기한 내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 재정지원 제한이 가능함 ○ 징계요구 이첩 시 관련 법 조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조치 시 문체부와 소통하여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384. 온라인 투표 확대 등 체육단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5.11월) “체육단체 혁신방안(선거제도 개편 포함)” 제49회 국무회의 보고 및 대한체육회 제9차 이사회, “선거제도 개선(안)” 의결 ○ ('25.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및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26.2월) 대한체육회 제1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선거인단 확대의 건)” 심의 <향후 추진계획> ○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 ('26.6월) 임시총회, 정관 개정안(선거인단 확대의 건) 심의·의결 - ('26년 중)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반 구축(선거관리시스템, 임원등록시스템 신설 등을 위한 예산 확보) ○ 회원단체장 선거제도 개선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이후 '26~'28년도에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주무부처, 체육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실성 있는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385. 스포츠영웅 현액식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 예산 복원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함. 동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포츠영웅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재개 및 중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7년부터 기금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86. 태릉사격장이 유네스코 지정으로 보수가 불가능함에도 선수의 훈련 보장을 위해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시설보수를 진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도 11월, 정부 예산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해 서울시체육회(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서(11억원 규모)를 받아 진중오 의원실에 전달 <향후 추진계획> ○ 태릉사격장 부지 소유주는 국가유산청, 관리 주체는 서울사격연맹으로 관리비, 인건비 일부는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고, 해당 시설은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대한체육회가 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387. 학생선수 대상의 무자격지도와 폭행 등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체육인 인권보호, 체육단체 비위사건 대응 및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렴윤리팀 신설 기반 마련('25.11월) ○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공문 배포('26.3월) ○ 체육계 비위사건 예방을 위한 신고 방법 및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요청 등 공문배포('26.4월) <향후 추진계획> ○ 회원단체 대상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6.5월) ○ 학생선수 대상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현장평가 모니터링 고도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점검 실시('26.7~9월) ○ 학생선수·지도자 대상 상황 기반 토론·의견 공유형 스포츠 인권 교육 방식 운영 확대('26.9~11월)
388. e스포츠와 파크골프 등 신규 종목의 전국체전 포함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므로 e스포츠와 파크골프 종목의 전국체육대회 종목 채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 예정 <향후 추진계획> ○ e스포츠 및 파크골프 등의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은 해당 종목의 전문선수 저변 현황, 시도별 선발전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89. 입시 승부 조작 의혹 인사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25.10.29.) 및 결과 통보('25.12.22.) - 스키협회 내부징계절차 이행 및 사무처 제도개선을 위한 별도 조사 병행(~'26.4월) <향후 추진계획> ○ 양측(신고인/피신고인) 재심 요청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예정(모니터링 병행)
390.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 인사 및 비리 등 운영 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조치 중 ○ 대한축구협회 감사(~'26. 상반기)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정
391. 시도 체육회별 생활체육 전국 대회 지원 규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향후 추진계획> ○ 시·도체육회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지원 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직접적인 지원 기준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나, 필요성 확인을 위해 지역별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음('26. 상반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9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92. 경영평가 가점을 위해 온라인 강좌 수강을 허위로 처리한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감사 및 결과에 따른 인사처분 완료 - 감사조치 요구('25.9.29.) 후 내부감사 착수 및 감사 결과 통보('25.12.23), 관련자 징계, 계량지표 재산정 처분, 통제 방안 마련 등 처분('26.2월) ○ 감사결과 토대 징계(중징계, 경고, 주의 등) 조치완료('26.2월) ○ 계량지표 재산정 및 관계기관 보고 - 외부기관에 의한 주요사업 계량지표 데이터 검증시행('25.10~12월) - 계량지표 실적 재산출 및 내부성과 평가점수 재산정('26.1월) - 재정경제부 감사결과 보고('26.2월) ○ 제도개선 - 계량지표 소관 본부장 검증 및 서명제출 의무화('26.1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영평가 계량지표 데이터 검증 및 책임 강화 제도 개선('26.2월) - IT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25년 계량지표 관련 시스템 및 데이터 이상 없음 확인('26.3월) <향후 추진계획> ○ 성과역량평가 및 심사분석 지침 개정 진행(~'26.5월)
393. 도급업체 직원에게 공식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령을 내린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도급업체 상주인력 시스템 접근권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25.11~12월) ○ 사내메신저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 및 교육 실시('25.11월~'26.1월) ○ 도급업체 인사사항 관여 금지 원칙 준수 <향후 추진계획> ○ 상기 개선사항 준수 및 관련자 대상 교육 실시(분기별) ○ 외부전문가(노무법인)를 활용하여 IT용역업체 관리체계 검증 및 개선 검토 완료(~'26.4월)
394. 도급업체의 보안규정과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	<조치사항> 조치완료 ○ 도급업체 보안규정 준수관련 - 통합유지관리 용역사무실 보안 및 용역업체 인력 관리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및 조치('25.12월) - 비인가 장비·회선 사용 등의 보안규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물리적 장치 강화 ○ 경영평가 관련 - 내부감사 결과('25.12.23)에 따른 관련자 징계 등 처분('26.2월) - 관련자 징계, 계량지표 재산정 처분, 통제방안 마련 등 조치('26.2월) <향후 추진계획> ○ 보안점검 강화 및 보안교육 실시 - 용역관리부서 주관 보안점검 강화('25년 분기별→'26년 매월) - 디지털보안팀 주관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연2회) ○ 도급업체 파견법 준수관련 - 외부전문가(노무법인)를 활용하여 IT용역업체 관리체계 검증 및 개선 검토 완료(~'26.4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395. 이사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이사장 임명 과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단 정관 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절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396. 과거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체육인에 대한 추가 보상 검토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사장의 이해관계와 관련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일시금으로 수령한 체육인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었으나, 현실적인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안건은 최종 검토 과제에서 제외하였음(’25.10월)
397. 스포츠토토 모바일 발매 도입에 따른 사행성 우려와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건전발전 종합계획(’24년~’28년)」 의거 정부의 사행산업 실명구매 확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 건전화 평가 “A”등급 달성(’24년) - 온라인 실명구매는 구매한도(10만원) 초과 및 청소년 구매문제를 원천차단하여 건전성 강화 - 온라인 실명구매를 통해 ’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판매점주의 투표권 비대면 판매문제 예방 등 판매점주 일탈·비위행위 방지 가능 ○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처 공단 홈페이지 공개(연도별 게시) <향후 추진계획> ○ 보안에 취약한 모바일 우회접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모바일 환경개선 방안 강구(’26년~) ○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대상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제도개선사항 지속발굴로 실명구매 확대 및 판매점 매출감소 방지 대책 마련(’26년~)
398. 올림픽테니스장 노후화와 국제대회 대비 부족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 계획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올림픽테니스경기장 시설개선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완료(’25.12월) ○ 개보수 관련 예산 확보(’25년 이월예산 3,281백만원, ’26년 예산 245백만원) ○ 공사 진행 중(테니스경기장 1~4층 석면 철거 완료(738.5㎡/’2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노후 경기시설 및 안전 관련 시설 보수 시행('26.1월~9월) - 관람석(8,812석) 교체, 전 코트 방풍막 및 네트 교체, 코트 탑코팅(8면),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리모델링 등으로 원활한 국제대회 개최 지원 * 공사비 35억원/ 공사 시행('26.1~9월) → WTA 코리아오픈 대회 개최('26.9월)
399. 체육시설 바닥재로 쓰고 있는 고무칩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인 PHAs 등이 검출된 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내체육시설 바닥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전국 지자체 관할 국민체육센터 489개소 체력단련장 바닥재 유해성 검사 요청 및 자료 수집('25.11.~'26.2.) ○ 안전기준 표준 마련(KC, KS 등) 관련 관계기관(국가기술 표준원 등) 협의('26.3~4월) <향후 추진계획> ○ 안전기준(안) 마련 논의 지속 및 기준 수립(~'26.12월)
400. 스포츠 과학원 R&D 사업의 특정 연구카르텔 독점 문제와 파생되는 연구비 부정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과학원 R&D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완료(감사원→결과 공단 미통지) ○ 연구과제 관리 채신방안 마련 및 해당사항 의원실 보고 완료('25.12.24.) - 주요 연구 규정 개정, 연구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예산 관련 교육 및 청렴선언문 등을 통한 청렴한 연구 윤리 조직문화 안착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및 피해복구('26년 상반기) ○ 주요 연구 규정 개정('26년 상반기) ○ 연구 관리·감독 체계 강화('26년 상반기) ○ 문체부 전수조사 및 조치에 대해 성실히 이행('26년 상반기)

【대한장애인체육회】 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01.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재난대피훈련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선수 참여를 의무화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선수촌 직원 73명, 입촌선수단 25명 및 이천소방서 참석하여 지진 및 화재발생 상황에 따른 대피, 초동조치 교육 및 실습 진행('25.11월) <향후 추진계획> ○ 선수단을 포함한 재난대피 훈련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시행 추진
402. 이천선수촌 내 종목별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 선수용 수중회복실을 설립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2026년 인근 장애인복지센터와 수중회복실 대관 협의 완료하여, 주 2회 대관 및 선수단 지원예정 <향후 추진 계획> ○ 중증장애인훈련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협의 및 '26~'30년 중기사업계획 내 관련 예산 증액안 제출
403. 2025년 제주 장애인체전 필수 인력의 항공료 삭감에 따른 대회 운영 차질 문제를 해결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문체부와 협의하여 '장애인전국체전 사업비' 내 예산 변경(조정) 및 현실적 대회 개최 방안 마련 ○ 개최지(제주) 협의를 통해 부족 자원 지방비 추경 예산 반영 협의 <향후 추진 계획> ○ 사업비 내 예산변경을 통하여 필수인력의 항공료 우선 배정 후 경기운영 관련 수당 감액 등 현실적 대책 마련 개최지 협의 중('26.6월)
404.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직원 퇴사율 증가 문제에 대응해 인력을 보강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가맹단체 인력 증원 필요성 근거 보완 및 정부 협의 추진('26.3월) <향후 추진 계획> ○ 가맹단체 직원 인력증원(인건비 예산 증액)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등과 적극 협의 추진 및 '26~'30년 중기사업 계획 내 관련 예산 증액안 제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05. 텐덤바이크 파일럿을 포함하여 비장애인 보조 인력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보험 가입을 제도화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현재 경기파트너는 일 12만원의 훈련수당과 훈련 제반 비용(식대, 숙박, 훈련용품, 보험 등), 국제대회 참가비 등을 선수와 동일하게 지원 <향후 추진 계획> ○ 경기파트너에 대한 처우 및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26.3월) 및 27년 예산 요구 시 해당 예산 반영 추진('26.4월)
406. 반다비체육센터의 시설 입지와 교통, 주차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반다비체육센터 실무자 간담회 개최('26.1월)를 통하여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안사항 안내 및 이동권 지원 관련 데이터 제출 요청 ○ 기본설계협의회 시 운영 계획상 셔틀버스 운행 또는 설계 시 콜택시 승강장 설치 등 반영 권고 <향후 추진 계획> ○ 데이터 분석에 따른 이동권 지원 우선순위 정리 및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 추진
407. 장애인 종목단체의 법인화를 지원하고 기부 및 후원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가맹단체 법인화 예산 반영 관련 정부 협의('25.12월) <향후 추진계획> ○ 법인화 예산 증액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 추진 및 '26∼'30년 중기사업계획 내 관련 예산 증액안 제출
408. 지적장애인스포츠 협회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분리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 사항> 조치 중 ○ IPC 정기총회와 집행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지적장애 종목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가맹에 대한 내부 방침 마련(∼'26.6월) <향후 추진 계획> ○ SOK 및 관계기관과 (가칭)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분리 논의(∼'26.12월)

【태권도진흥재단】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09.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관련해 단독등재 및 북한과의 공동등재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동등재 또는 단독등재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차기 등재 신청대상 공모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완료('25.12.18.) ○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또는 확장등재를 위한 차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26.1.19) 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 제출 완료('26.3.31.)
410.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차기 등재 신청대상 공모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완료('25.12.18.) ○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또는 확장등재를 위한 차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26.1.19) 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 제출 완료('26.3.31.) -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Taekwondo: A Dojang-centered Korean Training Tradition)'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협의 지속(계속)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1. 전임 대표의 특혜채용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장기간 병가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해당 건은 전임 대표를 피의자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전임 대표 외 기관 재직 직원의 경우 별도 범죄 혐의점에 대해 통보된 바 없음 - 전임 대표이사 검찰 송치에 따라 모회사 특정감사 진행 중('26. 3.~현재) ○ 해당 직원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 중임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조치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2. 올림픽테니스장 노후화와 국제대회 대비 부족한 시설, 급등한 대관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행사 지원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WTA 대관료는 주최측의 실제 시설사용 내역 및 관람권 판매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대회승격(250→500)이 대관료 상승의 주원인임 ○ 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타 행사 대관에 앞서 체육경기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장기 체육행사 시 부스사용료 30% 할인혜택을 제공 중임 <향후 추진계획> ○ 체육단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6 상반기) - 체육행사 우선배정 모집기간 확대(2주 → 4주) - 체육단체 대상 시설물 정보제공 확대(대관시설물 현황, 체육경기 이용사례 등) ○ 테니스장 노후시설의 적기 보수를 위해 시설 소유주인 모회사와 지속 협의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스포츠윤리센터】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3. 대한근대5종연맹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 지연, 코치 선발 과정의 규정 위반 의혹 등 운영과 인사 비리에 대해 징계 조치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및 일부회신('25.2., '25.9.)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결과 미회신건 조치 재요청('26.4.) ○ 대한근대5종연맹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26.上)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3항
414. 대한탁구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선수 교체를 한 점에 대해 징계 재조치를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25.4.) ○ 스포츠윤리센터 후속조치 결과(기관경고 불수용)회신('25.12.)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검토에 따른 검토의견(재조치 요구) 문체부 송부('26. 2.)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요구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하여 주무부처 협의 후 조치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5.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 협회장 재임 시기 비위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25.4.) <향후 추진계획>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대한탁구협회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여 조치('26.上)
416. 스포츠윤리센터의 상담 정규 인력을 확충하고 CTR 콜 센터를 구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상담사(3명) 결원 인력 신규 총원('25.11.) <향후 추진계획> ○ 통합콜시스템(CTI)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임대 추진(~'26.上) ○ 상담 정규인력 확충을 위한 상담인력 증원 요구('27년 예산)
417. 직원의 채용 내부자료 무단 열람으로 경징계 처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징계 과정과 회의록 관리가 보고 되도록 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회신('26.4.) <향후 추진계획> ○ 사무검사 결과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 등 징계 제도 운영 관련 개선 조치 예정

【한국스포츠레저】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8.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 확대 이후 비대면 판매 금지 조항으로 인해 소상공인 판매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판매점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실시('25년 ~) - 판매점협회 대표자 간담회, 지역별 판매인 간담회 추진 * 지역별 판매인 간담회('25년 7회, '26년 5회), 판매점협회('25년 2회, '26년 5회) ○ 판매점 건전화·사회공헌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제 확대 도입('26년 ~) ○ 판매점 경영지원 및 매출 활성화 확대 추진('26년 4월 ~) - 판매점 운영 소모품 구입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 - 매출 활성화 이벤트 및 프로모션 확대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차기 판매인계약 조건 관련 의견수렴 시행(계속) ○ 판매점 운영 소모품 지원 등 환경개선 시행('26년 4월~) ○ 스포츠 이벤트 연계 판매점 매출활성화 프로모션 시행('26년 4월~)

【한국관광공사】 19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19. 수의계약 관련 허위 작성 현장실사보고서와 부적절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화체육관광부 수의계약 특정감사 관련 서면 자료 제출 및 실지 감사 수감('25.10~11월) ○ 수의계약 현장실사 및 총량제 운영 방안 마련·시행('25.12월) - 수의계약 현장실사 대상 업체 및 계약, 실사예외사항,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 ○ 시규 「계약업무처리규정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개정('26.2월) - 수의계약 체결 시 대상 및 비교견적에 대한 조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준용 개정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수의계약 특정감사 결과 통보 관련 조치 결과 회신 예정('26.5월 중)
420. 상임감사의 고액 해외출장 및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 「여비규정」 제20조를 위반하여 초과 집행한 출장비 환입 및 담당자 대상 처분(예정) ○ 법인카드 사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매월 KTO클린(법인)카드 사용지침 및 사용기준 전 직원 대상 공유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니터링 강화
421.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저조한 사용률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공사-지자체 협의체 구성 - 협의체를 통해 성과 공유 및 사업 방향성 공유 등 업무 협의 진행('25년 6월, 12월) ○ 혜택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30여개 지자체, 70여개 업체 약 6천만원 제공('25년 기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관광주민증 협의체 정기회의 연 2회 정례 개최 및 단체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수시 협의 강화 ○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자 대상 여행혜택 쿠폰 지급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추진 ○ 혜택업체 부담 완화 및 사업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 예정('26년 하반기 중)
422.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취약계층 소외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의무를 이행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연중무휴 콜센터 운영 및 소외계층 전용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취약계층 가입 및 이용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주5일에서 연중무휴로 확대 운영('25.5월) - 장애인('25.11월 40명), 고령층('25.10월 166명) 전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관광주민증] 장애인* 및 고령층** 전용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14년 미만 미성년자 가입 지원('26년 상반기 중) * 지체장애인 무장애 해양체험 여행 상품 운영 예정('26.4월, 100명) ** 65세 이상 고령자 웰니스 여행 상품 운영 예정('26.5월, 100명) ○ [숙박할인권] 26년 상반기 숙박할인권 배포시(본 예산) 참여 OTA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 계층(장애인, 고령층 등) 지원 예정('26년 상반기 중) * (OTA별 예시) ▲배리어프리 전용관 구축, ▲고령자 타킷 큰글씨 기획전, ▲취약계층 디지털 카드(카카오 지갑 제공 취약계층 증명용 카드) 소지자 대상 별도 안내 및 수어 상담 서비스 등 운영
423. 사장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력이 강조되도록 공식 절차를 수립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의거,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관광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등 평가 기준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 민간 마케팅 전문가 박성혁 선임 완료('25.1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24.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협력기금과 부채 상환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정부대상 채무 조건 조정 노력 지속 중 - 공사는 통일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부채 경감, 상환 유예 등)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 - 또한 채무 조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3.7.4.,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이후 24년 재발의(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2024.12.31.)되었으며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심의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정부대상 협조 요청 및 법적 근거 마련 노력 지속 - 4월 중 통일부를 방문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재발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425.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시장 선임하고 공사 역할을 확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민간 마케팅 전문가 박성혁 선임 완료('25.12.31.) ○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 및 '26년 2,300만 명 유치목표 기반 주요 방한 시장별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26.3월), ▲ ‘지역’ 및 ‘고부가’(MICE/의료/크루즈 등) 외래객 직접 유치를 위한 공사 기능·역할 확대 추진('26.4월)
426.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해 관광객 보호를 위한 위기단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K-관광 이미지 훼손 방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위기단계 프로세스 개선 - 관광마케팅 및 한국관광 브랜드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위기단계 프로세스(위기경보 판단기준 등) 재정립 및 세부내용 개정 ○ 안전한 한국 및 방한 긍정 이미지 확산 추진 - 공사 중국지사 SNS홍보 채널(샤오홍슈, 웨이신, 웨이보 등), VK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한국 홍보 및 K-컬처 소재 활용 방한관광 관심도 제고 추진 - 중국 유력 OTA·생활플랫폼 협업 캠페인, 방한관광 B2C행사 개최를 통해 현지 소비자 대상 환대메시지 전파 및 혜택 제공 등 방한 긍정 이미지 확산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27. 국내 지도앱의 오류 개선, 다국어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국내 앱들과 협력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네이버지도 협력을 통한 다국어 서비스 개선 - 다국어 대중교통 길찾기 화면 UI/UX 개선('25.12월) - 국토지리정보원 연계 외국어 지도 서비스 고도화('25.5~12월) <향후 추진계획> ○ 네이버* 등 국내 지도 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외국어 서비스 지속개선 및 관련 해외홍보 지원 예정 * 관광교통민관협의체(총12개 기관) 협업사
428. 기초지자체로 의료관광 협의체를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기초지자체 단위 의료관광 지역협의체(고양특례시) 개최('25.12.12.),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현안 논의 및 협업과제 발굴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행사 고양시 의료기관 공동 참가('26.4월 / 러시아 의료관광 로드쇼, 카자흐스탄 KITF 박람회) ○ 몽골 유력 광산기업 대상 의료관광 상품개발 팸투어단 고양시 의료기관, 관광지 방문('26.5월)
429. 성과가 저조한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사업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베니키아 브랜드 민간이양 및 사업종료를 위한 필요 절차 시행중 - 브랜드 사용 실태조사 및 브랜드 가치 평가 실시 - 브랜드 민간이양 및 사업종료를 위한 법률 검토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베니키아 브랜드 매각 입찰 공고 시행('26.6월)
430. 성비위 및 이해충돌 의혹 있는 간부·직원에게 대하여 철저히 감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특정감사 진행 결과 청탁금지법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조치 및 처분 완료
431.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문체위 소위 심사 부결로 '26년 공사 관련 예산 삭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6.3월) 내용 반영 가이드라인 수정, 공사 홈페이지(한국관광 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27년 예산 복원 위해 문체부와 공동 노력 예정
432. 대북관광 자산 훼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광 연구 추진 경위를 재점검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대북관광 자산 훼손 관련 조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함 - '19년 북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물 철거 지시 후 ('19.10.25.)공사는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수립·이행 * 통일부 장관 주재 면담 참석 및 대응책 수립('19.10.31.) - '20년 6월 온천장 철거 관련 사실 확인 이후 통일부와 골장 대응 방안을 협의, 통일부의 북한 대상 소송(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 진행경과를 보며 대응책을 수립 ○ 통일연구원 제안 과제는 한반도 관광 재개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 - 공사는 한반도 관광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연구과제 제안 역시 그 노력의 일부임
433.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센터 2개소를 신설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6년 충남·전남 지역센터 신규 구축 예산(20억) 확보에 따른 센터 개소 준비 중 - 지자체(충남) 사업계획서 공문 접수('26.3월) - 자문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26.4월) * 지자체 행정통합 결정에 따라 전남 센터 구축 여부 미정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축 여부 결정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공사-지자체 협약 체결 및 센터 개소·운영 예정('26년 하반기 중)
434. 특수어 관광통역사의 현장 투입 방안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2025 관광통역안내사 특수어권 자격취득교육 실시 - 특수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교육 실시(총53명) * 최종 5명 합격자 배출(전체 교육인원의 10%) ○ 2025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실무체험교육 실시 - 특수어권 취득자 20%이상 우선 선발(12명) - 여행업계 매칭행사를 통한 현장취업 기회제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실무능력 역량 제고 - 전년도 특수어권 합격자(5명) 현장실무체험교육 실시 ○ 2026 특수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교육 확대 실시 - 비수도권 지역 대상, 추가 교육(관광안내실무과정 20명)
435.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과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중 ○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지원 - 공사-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콘진원 다자간 MOU 체결('25.7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해양·섬 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협력 - 해외 박람회 참가(영국 국제관광박람회, '25.11월), 로드쇼 연계, SNS 채널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지역 MICE 행사 지원 확대 및 행사 발굴·육성 - (지원 확대) ▲지역 개최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 30% 가산, ▲지역 공항 및 숙박 이용 MICE 단체 대상 지원금 상향, 버스 임차료 추가 지원 등 - (행사 발굴·육성) ▲글로벌 K-컨벤션 발굴·선정 시 지역 개최 행사 비중 확대, ▲MICE 행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시 비수도권 비중 확대 <향후 추진계획> ○ 바다가는 달 연계 여수 해양관광 상품 판촉 지원('26.5월) ○ 여수 금오도, 낭도 대상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시범 추진('26.5~10월)
436.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후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무비자 제도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공사는 불법체류에 대한 관리 권한은 없으나, 문체부 등 협업 방한관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판단 지원 - 현지 공관 공동 중국 여행업계 대상 무비자 제도 설명회 개최 (제도 설명, Q&A, 주의사항 환기 등)
437. 중국인 단체관광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하여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리를 강화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한국여행업협회 협업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역량 강화 및 우수상품 홍보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상 상품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관광 콘텐츠 답사 팸투어 추진('25.9~11월, 3회) - 중국지사 현지 설명회 등 활용 KATA 선정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홍보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38. 사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고려 여부를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25. 12. 29.) - 임원후보자 심사기준 세분화(신설) · 평가요소별 배점 구분 · 선임 대상별(사장, 감사 등) 심사양식을 별도 지정 - 위원회에 세부심사기준 조정권 부여(신설) · 후보자 심사에 있어 위원회에 후보자의 필요역량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서류 / 면접심사 전체 절대평가 전환(개선) · (기존) 서류심사 상대평가(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 부여) · (개선) 서류심사 절대평가 도입(후보자별 10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으로 전환 각 후보자 심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 - 동점자 발생 시 결정방식 명문화(신설) · 동점자 발생 시 위원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 - 임원 선임 기록물 관리기준 마련(신설) ·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 선임 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 기준을 명문화 · (보관기준) 위원회 회의록, 심사자료 영구보존 · (파기기준) 지원자 제출서류 : 180일 이후 파기
439. 기관장의 헌법 인식 표명을 회피하지 말고, 사장 선임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봉인된 평가표, 개인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법률검토 후 위원실에서 봉인 해제 및 개인정보 가림막 처리 후 열람완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40. 위탁 상담기관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관리 미흡 및 부적격 기관에 대한 위탁 문제와 국고 보조금 부정 징후 관리 미흡에 관하여 철저히 전수 조사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위탁 상담기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 완료('25.10) 및 △선정시 참여요건 강화 △자격 미달 시 해지사유 명문화 △이해충돌 방지 등을 반영해 규정 제정('26.4.)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위탁기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내부·위탁기관 교육 진행('25.11.~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44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조치 완료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연 2회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26.5.12)을 통해 예방교육 확대 추진 ○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통해 일선 학교 내 콘텐츠 활용 방법 안내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6.3.) ○ 학교 예방교육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박문제 교과 연계 예방 콘텐츠와 수업지도안 등을 추가 개발(’26년 하반기 보급 예정) ○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콘텐츠 신규 제작(’26년 하반기) 및 중앙교육 연수원 탑재(’27년 내)